

**‘통일을 지향하는  
민주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연구**

이인정  
(통일교육원)



# ‘통일을 지향하는 민주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연구

이 인 정 (통일교육원)

## 목 차

I. 들어가며: 통일교육의 지평 확대	IV. 통일 지향 민주적 시민성 함양 평생교육 프로그램 구축
II. 통일을 지향하는 평생교육 탐색	V. 나가며: 기대와 전망
III. 통일을 지향하는 민주적 시민성 탐색	

## 국문요약

본 연구는 ‘통일을 지향하는 민주적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다. 여기서는 통일 시대를 지향하며 평생교육이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고,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범국민적 통일의를 고양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성인학습자 대상의 민주적 시민성 함양 프로그램을 구축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의 유형 분류를 참조해 통일을 지향하는 민주적 시민성 함양 프로그램 구축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시도했다. 제시한 예시 프로그램의 주제는 첫째, 자유 교양 통일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오감(五感) 만족 유니테인먼트(Uni-tainment) 활동 프로그램’, 둘째, 자기주도성 함양 프로그램으로 ‘시서화(詩書畫)를 통한 통일 리더십 함양 프

로그램’, 셋째, 참여 역량 증진 프로그램은 ‘풀뿌리 통일시민 지역사회 통일학습 동아리 활동’, 넷째, 훈련형 프로그램으로는 ‘차세대 통일 시민 리더 과정(단기)’이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첫째, 평생교육, 시민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적 관점으로 통일교육의 지평을 확대함으로써 범국민적인 통일의지 고양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통일 준비 역량 결집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대상 시민교육 프로그램 제공에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비롯한 ‘다름’을 이해하고 포용적 태도를 기쁨으로써 통일 과정 뿐 아니라 통일 이후의 내적·사회적 통합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주제어: 민주적 시민성, 평생교육, 성인 학습자, 통일 리더십, 통일학습동아리, 통일 시민 리더

## I. 들어가며: 통일교육의 지평 확대

분단된 지 70년을 넘어선 오늘의 시점에서 통일교육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 도전 들로는 첫째, 점증하고 있는 세계화, 다문화 추세 속에서 기존의 ‘민족’이나 ‘당위’ 측면의 통일교육은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통일교육이 지니고 있는 인식적 토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광범위한 인식과 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매체·기술의 빠른 발달과 이로 인한 급속한 사회 변화는 고령화 추세와 맞물리면서 각 세대와 지역, 계층별 하위 집단 간의 차별성이 부각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대북·통일 이슈를 비롯해 다양한 측면에서 소위 ‘남남갈등’이 복합적 형태로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관련 정책의 추진력을 약화시키며 사회적 역량 발휘를 가로막는 기회비용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이 세계화·다문화 추세, 매체·기술의 급속한 변화, 고령화로 인한 세대 공존, 다양한 갈등의 점증이라는 배경은 통일교육에 있어서도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게 한다.

본 연구자는 통일교육이 평생교육, 시민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적 관점에 대해 폭넓은 수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한 판단의 배경으로는 첫째, 통일교육은 평생교육의 측면에서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지역, 계층을 고려하는 ‘시공간적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평생교육법 제2조 1호에 따르면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법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이 같은 협의의 정의는 학령기의 정규 학교 교육 경험을 제외한 상태에서 ‘사회교육’ 또는 ‘성인교육’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 같은 좁은 의미의 정의는 통일교육이나 시민교육과 같이 정규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교육을 포함하기 어렵고, 취학 전 연령이나 학교를 마친 이후 성인기에 이루어지는 해당 교육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통일을 지향하는 시민성 함양과 통일을 지향하는 평생교육은 비단 학령기의 정규 학교 교육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통일교육은 학교 이전부터 학교 과정을 포함해, 학교를 마친 이후에까지 사회 내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시공간적 확장이 필요하며, 그 학습 방법 역시 다양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넓은 의미의 평생교육 관점을 지향하는 가운데 ‘통일을 지향하는 민주적 시민성 함양’을 도모하고자 한다.

둘째, 통일교육이 평생교육, 시민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적 관점에 대해 폭넓은 수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의 배경으로서, 통일교육은 모든 연령대와 시공간, 모든 형식의 교육을 통해 ‘민주적 시민성 함양’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평생교육은 기본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성립되고 확장되어 온 측면이 있다. 이 같이 교육에 있어서의 민주화를 추구하는 입장은 교육을 통한 일상적 삶의 민주화와 이를 통한 공동체의 통합과 발전에도 의미를 지닌다. 특히 평생교육에서는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을 중시하는데, 이것은 바로 상호 공존과 관용, 포용의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기본적 방향과 주안점은 오늘날의 민주시민교육이 추구하는 기본적 방향과도 상통하며, 남남 갈등을 극복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추진 동력이 될 수 있다. 특히 통일 이후 남과 북의 ‘다름’을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통합의 발전적인 에너지로서 수용해 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평생교육의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시민교육은 궁극적으로 모든 개인이 만족한 ‘삶의 질’을 향유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이기도 하다. ‘삶의 질’은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목표가 되며, 교육이 추구하는 목표라고도 할 수 있다. 삶의 질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은 신체적·물질적 행복, 개인적 성취감, 성인역할 수행 등을 중요한 요소로 바라보고 있다. 결국 한 구성원의 행복과 성취뿐 아니라, 교육이나 책임, 시민으로서의 권리 인식, 공동체 생활과 같은 성인으로서의 성공적인 역할 수행이 삶의 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민주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우리나라가 분단 현실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갈등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의 민주적 시민성 함양은 통일 과정뿐 아니라 통일 이후의 내적·사회적 통합에 있어서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도 ‘통일 준비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관점 가운데 본 연구자는 통일교육이 추구하는 ‘통일의지’ 제고라는 목표는 민주시민교육이 추구하는 ‘민주적 시민성’ 함양이라는 목표와 상호 연계될 수 있다고 전제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민주적 시민성을 민주주의 정치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시민적 자질로서 바라볼 것이다. 민주주의 제도는 기본적으로 그와 관련된 지식과 가치, 태도를 갖춘 시민의 참여에 의해서 운영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통일교육지원법에서 밝히고 있는 바 통일교육의 목표 역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다. 그리고 우리의 헌법 역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하고 있다. 결국 분단 속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적 시민성’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을 확고히 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속에서 공동체의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자질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평생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통일 교육이 지니는 연관성과 중첩적 관계에 주목한다. 그 근거로는 우선 평생교육의 성립과 확대 과정이 그 자체로 민주주의적 측면에 부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은 전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정규 학교 교육과정 뿐 아니라 시공간적 확장과 학습 형식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민주적 시민성 함양과 통일의지 고양이라는 목표는 상호 연계될 수 있는 지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데에 착안할 것이다. 더불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급속한 사회 변동과 가치 혼란을 고려해, 이 같은 교육적 시도는 각 대상의 연령, 세대, 직능, 지역, 계층 등 다양한 측면에 주목해 특화된 통일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평생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관련 국내·외의 문헌과 연구 및 자료를 수집해 통일교육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방식을 추구할 것이다. 첫째, 평생교육의 개념과 유형, 현황에 대한 문헌연구를 토대로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 차원의 통일교육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둘째, 민주적 시민성의 개념 및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정규 학교교육과정을 넘어 생애 전반으로 확장 가능한 평생교육 차원의 민주시민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를 통일교육과 연계할 것이다. 셋째, ‘통일을 지향하는 민주적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러한 목표가 평생교육 차원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축될 가능성을 탐색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민주적 시민성 함양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과 주요 활동을 정리할 것이다.

## II. 통일을 지향하는 평생교육 탐색

### 1. 평생교육의 의미와 유형

#### 가. 평생교육의 의미

통일 시대를 바라보며 민주적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평생교육의 과제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생교육의 개념과 시민교육에 있어서의 의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은 법적 측면과 학문적 측면, 또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누어 그 개념 정의를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평생교육법에 드러난 정의는 법적 맥락이자 협의의 관점에 해당한다. 평생교육법 제2조 1호에 따르면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기존의 ‘사회교육’ 또는 ‘성인교육’ 등과 관련되는 의미로서 정규 학교 교육 경험을 제외한 교육 경험을 의미하게 된다.<sup>1)</sup> 즉 학령기를 벗어나 이루어지는 교육이자, 정규 학교교육 시간 및 학교라는 장소를 벗어나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정의는 정규 학교 교육과정에서 시도되는 시민교육이나 통일교육을 포함하기 어려우며, 학교 이전 시기 및 학교를 마친 이후 성인기에 이루어지는 교육적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보다 넓은 의미로서의 평생교육 개념 정의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적 측면을 보다 확장해 정규 학교교육 경험까지도 평생교육에 포함한다. 따라서 이 경우 평생교육은 한 개인이 ‘요람부터 무덤까지’ 전 생애라는 기간 동안, 그리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전 삶의 공간 속에서 개인이 지니게 되는 학습 경험을 포함하여 다루게 된다. 또한 광의의 평생교육은 교육의 형식 역시 확장함으로써 개인의 발달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학습활동, 즉 형식·비형식·무형식의 학습활동 전체를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sup>2)</sup> 이 같은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은 통일 이전 시기와 통일 과정, 그리고 통일 이후의 사회 통합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제인 통일을 지향하는 민주적 시민성 역시 학령기뿐 아니라 학령 이전이나 이후의 모든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교육의 방식이나 학습활동 역시 다양한 영역과 유형을 포괄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평생교육의 정립 과정은 민주시민교육과도 중요한 관련성을 지니고 이루어졌다.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평생교육의 개념이나 관점은 유엔 산하 교육, 과학, 문화 분야 기구인 유네스코의 영향이 크다. 유네스코의 기본 입장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자신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1) 김한별, 『평생교육론』, (서울: 학지사, 2014), p. 22.

2) 김한별, 위의 책, 2014, pp. 30-33.

하며, 특히 교육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해 무지를 극복하고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범세계적 차원에서 교육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랑그랑이 주장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교육받을 권리’를 강조하는 데로 이어졌다. 또한 겔피의 ‘교육 민주화 실현을 위한 평생교육의 역할’에 대한 강조 등은 교육을 통한 일상적 삶의 민주화와 이를 통한 공동체의 통합과 발전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sup>3)</sup> 즉 평생교육은 근본적으로 모든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권리와 존엄성의 보장에 중요한 관심을 지니고 있다. 한반도의 분단은 남북한 구성원 모두에게 보다 큰 자유와 삶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 지역의 주민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비롯해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평생교육이 지향하는 교육에 있어서의 권리와 삶의 민주화, 그리고 공동체의 통합과 발전은 통일의 당위성과 의의, 그리고 통일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오늘날의 평생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유네스코에서 등장한 프랑스의 포레 보고서이다. 포레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과 같이 비인간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에서는 신체, 인지, 감성, 윤리적 요소들 간의 균형 있는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학습은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수행되고 모든 사회적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을 넘어 ‘학습사회(learning society)’의 단계에까지 도달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럴 때에야 교육의 민주화와 삶의 민주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았다.<sup>4)</sup> 학습사회를 통한 인간소외의 극복, 그리고 궁극적인 삶의 민주화를 추구하는 포레 보고서의 지향은 통일한국의 시민교육과 이를 통한 사회 통합이 비단 북한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의미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유네스코의 들로르 보고서에서는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네 가지의 학습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sup>5)</sup> 첫째, ‘알기 위한 학습’은 개인이 지식과 기술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학습으로서, 1985년에 파리 국제성인교육회의에서 채택한 ‘학습권’ 선언으로 이어졌다. 둘째, ‘행위를 위한 학습’은 개인이 노동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스스로 삶의 물질적 기반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은 오늘날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을 비롯해 상호 간 ‘다름’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포용적인 태도를 기르는 것과 관련되며, 특히 본 연구의 주제인 시민성의 함양과도 관련을 지닌다. 넷째, ‘존재를 위한 학습’은 모든 개인이 고유한 존재로서, 각기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지향한다. 들로르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이와 같은 학습 유형들은 남북한 통일과 사회통합을 위해서 평생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형성된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은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개인의 모든 형태의 변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이란 “개인과 사회의 지속적 성장을 이끄는 방향으로 ‘평생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도

3) 김종서·김신일·한승희·강대중, 『평생교육개론』, (파주: 교육과학사, 2009).

4) 한승희, 『평생교육론』, (서울: 학지사, 2006).

5) 유네스코 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 저, 김용주·김재용·정두용·천세영 공역, 『21세기 교육을 위한 새로운 관점과 전망』, (서울: 오름, 1997).

적이고 조직적인 노력<sup>6)</sup>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따라서 평생교육은 모든 구성원과 공동체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교육의 기회를 확장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런 점에서 평생교육은 그 자체로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적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시민 사회의 성숙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 나. 평생교육의 유형

평생교육은 시간, 공간, 형식에 있어서 교육 기회를 다원화하고 확장하고자 하는 교육적 시도로서, 유형 역시 매우 다양하다. 콕스(P. Coombs)는 ‘의도적 교육’과 ‘비의도적 교육’으로 나누어 그 하위 유형을 구분했다. 그에 따르면 ‘의도적 교육’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적 활동’으로서, 학교교육과 같이 국가가 학력이나 학위를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형식교육’과 교실, 교사, 시간표 등을 갖추고는 있으나 국가 인증을 받지 않는 ‘비형식 교육’으로 나누고 있다. 반면 ‘비의도적 교육’이란 어떤 활동의 주된 목적이 교육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활동 속에서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무형식 교육으로서, 학력보충교육이나 기업교육, 시민교육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회교육과 관련된다.<sup>7)</sup> 통일교육 역시 학령기 동안 정규 학교교육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형식 또는 비형식 교육으로서의 ‘의도적 교육’으로서의 측면이 있는 동시에, 다양한 학교 외 통일 관련 교육 활동이나 사회통일교육 활동 등을 통해 통일의지를 고양하고 통일 준비 역량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는 ‘비의도적 교육’의 측면을 모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 분류 역시 다양한데,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시민’ 또는 ‘시민의식’ 교육 프로그램 분류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최운실은 시민사회의식 교육프로그램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정치의식, 경제교육, 국가안보, 인구문제, 국제정세, 지역사회 이해, 민주시민교육 등 ② 소비자 의식 교육 합리적 소비, 물자 아끼기, 지역사회 이해 등 ③ 환경의식교육 환경문제, 환경과 사회 등 ④ 근로의식교육 근로자 의식, 노사문제 등 ⑤ 성의식교육 성교육, 여성의식, 양성평등 등이다.<sup>8)</sup>

평생교육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유형 분류들 중 남북한 통일에 있어서 의미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내용 범주’와 ‘효과 범주’의 두 기준으로 평생교육을 유형화한 뒤, 이를 다시 개인과 사회의 영역으로 나누는 관점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평생교육은 ‘개인 소비형’ 프로그램, ‘개인 개발형’ 프로그램, ‘사회 참여형’ 프로그램, ‘사회 적응형’ 프로그램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개인 소비형’ 프로그램은 일반 시민이 자신의 흥미와 관심을 표현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여가 스포츠, 취미, 생활 중심의 자유 교양 프로그램으로, 개인이 자신의 시간과 재정을 활용해 배움의 즐거움을 향유하고 삶의 수준을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둘째, ‘개인 개발형’ 프로그램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학습자가 지닌 잠재적인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 자기능력 개발 프로그램이다. 셋째, ‘사회 참여형’ 프로그램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소속된

6) 김한별, 『평생교육론』, 2014, p. 34.

7) 조영희·김선혜·김학묵·박수선, 『평생교육 차원에서 대국민 평화교육 실시방안 - 평생교육으로서의 평화지향적 사회통일교육』, 통일부 정책용역보고서, 2007, p. 5.

8) 조영희·김선혜·김학묵·박수선, 위의 책, 2007, p. 41-43.



공동체와 조직의 다양한 문제를 바라보며 학습자 스스로 의식적인 각성과 실천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와 현안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시민 단체를 통해 사회를 개선하거나 개혁하는 데 관심을 둔다. 넷째, ‘사회 적응형’ 프로그램은 개인이 직업을 비롯해 업무를 수행하는 수준이 증진되도록 지원하고, 고용의 지속 가능성을 신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주로 직업훈련, 직무연수, 기업교육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다.<sup>9)</sup>

한편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계의 지향과 관련된 분류들 중 본 연구와 관련해서는 교육 참여자의 수요, 즉 교육 참여 동기를 파악하여 수요자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이 주목할 만하다. 호울(C. O. Houle)은 성인 교육의 참여 동기를 ‘명시적 목표지향적’ 학습 동기, ‘활동지향형’ 학습동기, ‘학습지향형’ 학습동기로 구분했다. ‘명시적 목표지향형’ 학습동기를 보유한 학습자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교육을 활용하기 때문에, 자신이 세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기관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활동지향적’ 학습자들은 특정 목표를 획득한다거나 어떤 과목을 배우는 것보다는 활동 그 자체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요한 참여의 목적으로 삼는다. 마지막으로 ‘학습지향적’ 학습자들은 배움과 지식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평생교육 참여 동기와 관련한 국내의 연구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학습지향적’ 동기와 ‘활동지향적’ 동기로 학습에 참여하는 성인 학습자의 비율이 ‘목적지향적’ 동기로 참여하는 동기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비해 외국의 연구들에서는 진로와 직업적 동기들이 중시되면서 ‘목적지향적’ 참여 동기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평생교육 참여 실태에 대한 다양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학습자들이 교육에 참가하는 가장 주요한 목표는 교양과 자기만족·내적 보람, 자기 성장이며, 이는 시대가 바뀌더라도 크게 변화가 없으나 그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sup>10)</sup>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역시 학습자의 다양한 참여 동기를 고려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프로그램의 형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2. 평생교육의 현황과 과제

### 가.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현황

우리나라의 현행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에 기초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1999년에 제정되고 2008년에 개정된 것이다. 1999년 이전까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문맹의 퇴치와 계몽 사업을 중심으로 성인 대상의 기초 교육 형태로 시작되었다. 이후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새마을운동과 연계한 새마을교육이 실시됐고, 각종 사회교육기관이 설립되면서 지역사회개발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졌다. 1982년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성인 교육을

9) 김한별·박소연·유기웅, 『평생학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파주: 양서원, 2010); 김한별, 앞의 책, 2014, p. 180.

10) 최운실 외, 『평생교육 참여실태 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5), p. 9.

지원하기 위한 맥락에서 ‘사회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성인 대상의 고등교육기회가 확대되었다. 이후 인적자원개발법이 제정되고 이후 평생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대학을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 체계가 더욱 확대되고, 민주화·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평생학습도시’ 사업 등이 이루어졌다. 오늘날의 평생교육은 그 주체에 있어서 기존의 정부나 공공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의한 교육프로그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 내용 역시 기존의 지역개발이나 산업 발전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의 역량 개발 및 여가 등 다양한 활동과 관련된 평생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항에서 6가지 영역으로 분류한 틀을 기준으로 한다. 법령에 등장하는 6가지 영역은 ① 기초문해교육, ② 학력보완교육, ③ 직업능력교육, ④ 문화예술교육, ⑤ 인문교양교육, ⑥ 시민참여교육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최근으로 오면서는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기초문해뿐 아니라 정보문해교육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면서 여러 조직에서 직업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다양한 시민단체들에 의해 다양한 주제와 내용의 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에도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의 평생교육이 시도되고 있다.

상기한 평생교육의 6개 분류 중 본 연구 주제와 관련이 깊은 영역은 ‘시민참여교육’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민교육이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는 것과, ‘시민 참여’를 위한 역량 제고를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다.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은 인권존중, 토론과 협상문화의 정착, 공중도덕과 시민질서, 건전한 소비, 공동체를 위한 자기희생 등 다양하게 요구된다. 이러한 민주시민의 자질은 단시간에 완성되지 않으며, 평생에 걸친 일관된 학습경험을 필요로 한다.<sup>11)</sup> 따라서 시민참여교육은 현대 민주시민에게 요청되는 자질이나 역량을 개발하며, 공동체를 형성하거나 통합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남북한의 통일은 단순히 분단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려는 회귀적 통일이 아니며, 남북한 지역 주민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통일 사회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남북한 지역 주민 모두의 성숙한 시민 의식과 적극적인 시민 참여의 태도와 참여 행위를 필요로 하며, 이런 점에서 시민참여교육이라는 평생교육의 영역은 통일 이전과 통일 이후 모두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현행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들로는 시민책무성프로그램, 시민리더역량 프로그램, 시민참여활동 프로그램 등이 있다. 첫째, ‘시민책무성프로그램’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사회적 책무성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이자, 사회 통합 및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고 지원하며 인증하는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권, 양성 평등, 다문화 이해, 환경·생태, 주민 자치, 지역 및 국가정책 이해, 민방위교육 등 다양하게 구성된다. 둘째, ‘시민리더역량 프로그램’은 국가 및 지역사회에서 중시하는 다양한 공익적인 활동이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민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자질과 역량을 육성·개발·인증하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면 현재 지역사회의 리더, 평생학습 리더, 평생학습 상담자 등을 양성하거나, NGO 리더 또는 지역의 역사·문화 해설

11)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 평생교육 협력체제 구축방안』, 국립특수교육원 정책포럼 자료집, 2001.

사 등의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셋째, ‘시민참여활동 프로그램’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지역사회 사업이나 지역 조직에 개인 또는 집단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지역사회에서의 평생학습 기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그 내용으로는 학습동아리 활동, 평생교육 자원봉사, 평생학습 네트워크 등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시민참여교육은 향후 남북이 통일된 후 구성원 각자가 지녀야 할 통일 한국의 시민으로서의 책무성을 인식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지역의 공공 이익을 구현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 차원의 자아실현 및 지역사회와 통일 국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 나. 통일을 지향하는 평생교육의 과제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안에 산업화에 이어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들이 생겨나 시민들의 시민 의식을 향상시키고 시민 참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가 이루어 온 경제적 발전과 교육 기회의 확대는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을 성숙하게 하는 데 기여해 왔으며, 이는 또다시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되고 통합된 사회로 성숙해지도록 하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시민의식의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며, 많은 노력과 시일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3만여 명의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 내에서의 오랜 정치사상교양의 영향과 민주시민 교육 기회의 부족으로 인해 민주적 시민의식과 관련된 가치나 태도를 내면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생교육은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남북 지역 주민 간에 시민의식을 공유하며 더욱 성숙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도전적 과제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일 이후의 사회는 현재와는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시민의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70년 이상의 분단으로 인해 서로 다른 체제 하에서 살아 온 남북한 주민들 간에는 서로 다른 가치관이나 태도가 드러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을 지향하는 시민교육은 비단 북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 확대 방식으로 제한될 것이 아니라, 남북한 지역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통일 시대 시민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 사회에서 요구되는 민주시민의 자질은 보편적 관점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인간 존엄성의 기본적 가치 및 자유와 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 서로에 대한 관용과 배려, 조화와 타협의 가치를 중시하는 시민교육이 중요할 것이며, 다문화 시대의 추세에 부합하도록 혈통의 유사성을 넘어 언어나 문화, 제도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다원성에 대한 존중이 필요할 것이다.

광의의 평생교육에서 바라볼 때 개인은 ‘요람부터 무덤까지’ 전 생애 동안,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전 삶의 공간에서 학습 경험을 지니게 된다. 즉 통일을 지향하는 민주적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역시 평생에 걸쳐 전 삶의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북한 통일은 비단 제도 차원의 통일에 그칠 수 없는 것으로, 북한 지역 주민만이 아닌 남북 지역 모든 구성원들에게 인식과 가치, 태도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장기간을 필요로 한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과정을 살펴보다도 기존의 남한 주민들과 진정한 일체감을 느끼고 하나가 되는 ‘마음의 통합’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통일 시대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요청되는

이러한 변화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 학교나 직장, 지역사회, 국가 등 모든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통일 시대의 시민교육 역시 남북 지역 주민을 막론하고 모든 통일한국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평생에 걸쳐 시도되어야 한다.

한편 평생교육은 궁극적으로 모든 개인이 만족한 삶의 질을 향유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이다. 삶의 질은 모든 개인이 추구하는 생의 목표이자 교육이 추구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다.<sup>12)</sup> 삶의 질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신체적·물질적 행복, 개인적 성취감, 성인 역할 수행 등이 삶의 질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첫째, ‘신체적·물질적 행복’은 신체적·정신적 건강, 의식주, 재정적 보장, 위협으로부터의 안전과 관련된다. 둘째, ‘개인적 성취감’은 만족이나 행복감과 관련된다. 셋째, ‘성인 역할 수행’은 이동과 지역사회 접근, 직업·진로 및 고용, 레저와 레크리에이션, 개인적 관계와 사회적 네트워크, 교육적 성취, 정신적 만족, 시민권,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다. 이러한 관점들은 한 구성원의 행복과 성취뿐 아니라, 교육이나 책임, 시민으로서의 권리 인식, 공동체 생활과 같은 성인으로서의 성공적인 역할 수행이 삶의 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을 알게 한다.<sup>13)</sup>

통일한국의 평생교육 역시 통일한국 국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을 높이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통일 이후 국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은 무엇보다도 그 자신이 지니는 독립된 개체로서의 자존감이나 만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통일 시대에는 모든 구성원에게 생명권을 비롯해서 건강하고 안전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개인 스스로도 이러한 권리를 인식하고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통일 이후의 삶의 질과 만족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통일된 국가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지역사회, 교육이나 직업 및 여가 등 다양한 집단이나 공동체와 깊은 연관을 지닐 것이다. 따라서 통일한국 구성원들의 삶의 질과 만족은 그들이 일정한 집단에서 일정한 지위와 역할을 담당하여 성공적인 역할 수행을 하는 것과 관련될 것이다. 또한 적절하고 충분한 인간관계를 영위하고 다양한 사회 활동과 시민으로서의 적절한 책임감을 지닐 때 통일 이후 남북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이 고양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개인의 삶의 질이나 만족은 시대, 장소, 그리고 각 개인별 및 생애단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또한 남북한 통일이 언제, 어떤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에 따라, 그리고 통일 이후의 중요한 단계마다 남북한 지역 주민 간, 그리고 각 개인 간에는 삶의 만족에 대한 느낌이 상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한국에서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평생교육은 비단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는 동화의 노력이나 지식의 학습을 넘어서는 차원을 필요로 한다. 통일한국의 평생교육은 구성원 모두의 건강을 비롯한 안정적인 생활의 유지에 기초를 두어야 하며, 통일된 공동체 내에서의 건전하고 즐거운 인간관계와 시민적 책무감, 그리고 구성원 개개인이 느끼는 만족의 감정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의 평생교육은 단순히 동화주의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통합교육이나 일방적인 적응 교육에 그쳐서는 안 되며, 개인과 사회의 영역 모두에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개인적 차

12) Dennis, R. E. Williams, W. Giangreco & Cloninger, C. J., “Quality of life as context for planning and evaluation of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Exceptional Children*, 59(6), 1993, pp. 499-512.

13) Halpern, A. S., “Quality of life as a conceptual framework for evaluating transition outcomes”, *Exceptional Children*, 59(6), 1993, pp. 486-498; 정동영, “장애우의 사회참여와 평생교육”,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교육 과제 세미나 자료집, 평생교육진흥원, 2010. 10. 10. p. 58.

원에서 통일시대의 평생교육은 북한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남북 지역 주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북한 지역만이 아닌 통일한국 구성원 모두의 시민의식을 고양하고 더욱 성숙하게 함으로써 각자가 소속된 지역사회 및 통일된 국가의 통합과 개선·발전까지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통일시대는 분단으로 인한 폐해와 이념적 갈등은 소멸하거나 감소하더라도 통일로 인한 새로운 제도와 인간관계로 인한 다양한 갈등과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에서 통일시대의 사회 통합은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절차뿐 아니라, 이것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적 환경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들의 가치, 태도, 행위규범은 제도와 절차가 작동하는 바탕인 동시에 그러한 제도와 절차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 같은 개인의 가치와 태도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장기간을 요한다는 점에서,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적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평생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통일 시대의 시민교육과 이를 통한 민주적 시민성의 함양은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분단으로 인한 냉전적 사고를 극복하고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상화와 정치사상교양으로 인해 정체되어 있는 북한 지역 주민의 시민의식과 잠재력을 구현하여 개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통일 시대의 시민교육은 통일된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시민적 성숙을 도모하며, 소통과 공감 및 상호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민족,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Ⅲ. 통일을 지향하는 민주적 시민성 탐색

#### 1. 시민성 관련 개념 고찰

##### 가. ‘시민’의 의미와 변화

통일을 지향하는 민주적 시민성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시민, 시민성, 시민의식을 비롯한 관련 용어의 의미와 선행 연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시민’은 다의적 의미를 지니는 개념으로, 시대와 장소에 따라 정치·사회적,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의미에 있어서 일정한 변화가 존재한다. 그 기원은 고대 아테네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시민을 뜻하는 아스토스(astos) 또는 아스테(astè) 중에서 법을 제정하고 지배와 피지배의 권리를 갖는 등의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폴리테스(politès) 또는 폴리티스(politis)라고 불렀다. 고대 로마에서는 성인 남자 자유인으로서의 시민을 시비스(civis)라고 부르면서 로마법 체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sup>14)</sup> 로마에서 시민의 집합체 즉 시민공동체는 시비타스(civitas)로 불렀는데, 초기에는 ‘도시 거주자’로서의 제한적인 의미를 지녔으나 14세기 말에는 ‘국가 거주민’으로 보다 확대됐다.<sup>15)</sup> 근대 사회에서 시민 개념은 하나의 국가나 공동체의 구성원을 의미하면서 외국인과 구분하는

14) 이동수·송경재·신두철·이성훈·주성수·채진원, 『민관협력과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청사진』, 특임장관실 정책연구 보고서, 2012, p. 6.

15) 윤광일·오수웅·박가나, 앞의 책, 2016, pp. 12-13.

의미로 사용됐다. 근대 서구에서는 도시 거주민을 유산계급, 도시 상공업자의 의미를 담아 ‘부르주아지’(bourgeoisie)로 불렀다. 외국으로부터의 이주자들의 경우에도 일정한 거주 기간과 자격조건을 갖출 경우 부르주아지의 지위를 부여했다.<sup>16)</sup> 18세기 루소(J. J. Rousseau)의 『사회계약론』에서 ‘시민’은 단순히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는 법적 명칭을 넘어, ‘주권적 권위에의 참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시됐다.<sup>17)</sup> 특히 프랑스 혁명 이후 천부 인권의 개념 및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갖는 시민들의 동의에 기초한 공화국 개념이 확산되어 나갔다. 즉 근대적 시민은 계급이나 성별, 인종, 지역, 학력, 지위와 관계없이 누구라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sup>18)</sup>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시민은 ‘국민’이나 ‘대중’, ‘민중’과 달리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이자, 국경을 초월하는 확대된 개념으로까지 사용되고 있다. 첫째로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민’은 피동치자나 수혜자로서의 수동적 의미를 내포할 수 있는 반면, 오늘날의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시민’은 국가나 정부를 넘어선 또 다른 공적 영역을 만드는 능동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둘째로 ‘대중’은 비교적 수동적이고 획일적인 집단으로서 자신의 이익에 비해 사회적 의식은 뚜렷하지 않은 익명의 다수 집단의 의미를 지니는 반면, ‘시민’은 능동적인 사회적 주체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셋째로 ‘민중’은 피지배자이면서도 저항과 비판의 행위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으로서의 능동적인 주체적 인식이 다소 제한적이다.<sup>19)</sup> 마지막으로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시민’은 하나의 국민국가 구성원을 포괄<sup>20)</sup>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협소한 국경을 초월해 세계적 가치와 전 지구적 공동체성을 가진 ‘세계시민’의 논의로까지 확대되고 있다.<sup>21)</sup>

본 연구의 주제인 ‘통일을 지향하는 민주적 시민성’에서 그 주체가 되는 ‘시민’ 역시 이상과 같은 ‘시민’ 개념의 변화를 고려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 즉 남북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수동적인 국민 개념이나, 획일적인 다수 집단으로서의 대중 개념, 그리고 저항과 비판의 행위자로서의 민중 개념을 넘어서야 한다. 통일을 지향하는 민주적 시민은 오랜 분단 현실에 무감각해지거나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이 같은 분단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고 자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통일 인식을 지니는 존재로 성숙해나갈 필요가 있다.

## 나. 시민성과 인성

시민성과 관련해 자주 사용되는 유사 개념으로서 ‘인성’은 그 정의가 매우 다양하고 학계에서 합의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인성 개념은 ‘인간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의미하며, 유사한 표현으로서 개성(personality), 인간성(human nature), 도덕성, 윤리성, 자율성 등과 관

16) 김현·송경재, 『시민성 제고를 위한 대안적 패러다임의 모색 - 시민교육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 2015. p. 7.

17) 윤광일·오수웅·박가나, 앞의 책, 2016, p. 13.

18) 이동수·송경재·신두철·이성훈·주성수·채진원, 앞의 책, 2012, p. 9.

19) 이동수·송경재·신두철·이성훈·주성수·채진원, 위의 책, 2012, p. 10.

20) 손경애·이혁규·옥일남·박윤경,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서울: 동문사, 2010); 김현·송경재, 앞의 책, 2015. p. 7.

21) 배영주, “세계 시민의 역할과제를 중심으로 한 세계시민교육의 재구상”, 『교육과학연구』, 제44집 제2호, 2013, pp. 145-167; 김현·송경재, 앞의 책, 2015. p. 7.

련이 깊다. 대체적으로 인성은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성품인 반면, 시민성은 공동체 생활 속에서 형성되는 성품으로 간주<sup>22)</sup>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인성은 인간이 가진 가치를 중시하는 입장으로서는 개인의 가치관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반면, ‘시민의식’은 그러한 가치를 사회 속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의식으로서 민주주의를 비롯한 정치, 사회적 측면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준거 틀<sup>23)</sup>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인성의 개념은 대체로 개체주의적(individualism) 관점 가운데 국가 공동체와 분리해 고립적이고 탈맥락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인성을 국가나 사회 등의 공동체와 연계해 바라본다. 그는 인간은 잠재적인 능력인 ‘탁월성’을 실현한 상태인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라는 정치공동체(politeia)가 필요하며, 이런 점에서 인간의 본성은 곧 정치적 동물(homo politicus)이라고 규정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보는 정체들은 군주정, 귀족정, 혼합정을 비롯해 참주정, 과두정, 민주정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예를 들면 군주정의 경우 피지배자로서의 시민의 탁월성보다는 지배자로서의 군주의 탁월성이 더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혼합정의 경우 ‘훌륭한 사람과 ‘훌륭한 시민’이 지니는 탁월성이 서로 일치하게 된다고 보았다. 즉 “훌륭한 시민은 자유민답게 지배할 줄 알고 자유민답게 복종할 줄도 알아야 하며, 바로 이런 것들이 시민의 탁월성”<sup>24)</sup>이라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혼합정은 오늘날 민주공화정과 관련이 깊으며, 시민권(citizenship)과 시민성(civility), 리더십(leadership)과 팔로워십(followership) 등 국가와 시민의 관계를 바라보는 데 시사점을 준다.<sup>25)</sup>

한편 현대 사회에서 사용되는 인성 개념은 복합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열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인성이란 인간 본성(human nature), 인간성(humanity), 인격(personality), 성격(character)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비단 개인적 측면에서만뿐 아니라, 오늘날 다수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인성교육을 공동체와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시민권이나 시민성이 민주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의무, 시민적 덕성(덕목), 정치적 참여 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 역시 인성교육과 중요한 관련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sup>26)</sup>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인성과 시민성의 관련성을 인정할 경우 인성이란 공동체 내에서 사회·정치적 존재로서 인간이 지켜야 할 올바른 가치와 규범, 윤리적·도덕적 가치의 문제와 관련된 공동체적인 인간의 성품을 지칭한다. 그리고 시민성이란 개인적 차원에서 발달된 인성이 공동체 내에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성품이자, 스스로 의무감을 지니고 타인들과 자발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성품<sup>27)</sup>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일교육으로 연관해 생각할 경우, 분단된 한반도라는 구조 속에서 사회·정치적 존재로서 개인의 인성 역시 분단의 폐해를 인식하고 바람직한 통일을 이루기 위한 올바른 가치와 규범을 내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의 인성 차원에서 형성된 통일과 관련된 가치와 규범은 공동체 내에서 통일을

22) 김현·송경재, 앞의 책, 2015. p. 6.

23) 송경재·채진원, 『사회 혁신을 위한 국민 인성 및 시민의식 제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정책연구용역사업, 2014, p. 3.

24) 송경재·채진원, 위의 책, 2014, p. 65.

25) 송경재·채진원, 위의 책, 2014, pp. 64-67.

26) 송경재·채진원, 위의 책, 2014, p. 11.

27) 김현·송경재, 앞의 책, 2015. p. 9.

지향하는 시민적 덕성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이 같은 시민적 덕성은 타인들과의 소통과 연대를 통해 더욱 확고해져 나갈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

#### 다. 시민성과 시민 의식

앞서 살펴본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적으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좋은 사람’과, 개인이 소속된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지니고 있는 ‘좋은 시민’을 구분했다.<sup>28)</sup> 즉 시민은 개인적인 의무감 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인 시민들과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sup>29)</sup> 시민이 되는 자격으로서의 ‘시민권’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정하는 법적 지위와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sup>30)</sup> 그러나 한 개인이 시민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법적 지위로서의 ‘시민권’을 지니는 것을 넘어 ‘시민성’을 발휘함으로써 타인과 소통하면서 공동의 선을 논의하고 실천할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sup>31)</sup> 이런 점에서 오늘날 바람직한 시민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시민으로서의 덕성을 발휘하면서 자신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이 지녀야 하는 ‘시민성’이란 일반적으로 사회적 정의와 선을 추구하는 덕목이며, 타인과 함께 ‘공동선(common good)’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덕목이다.<sup>32)</sup> 이런 점에서 ‘시민성’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들도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믿고, 타인과 함께 시민 사회를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태도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이익이나 주장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타인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려는 태도가 중요하다.<sup>33)</sup> 시민성은 시민이 지녀야 할 정신이자 시민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품성과 자질을 말한다. 시민성이 내포하는 시민으로서의 미덕들로는 자유, 평등, 권리, 책임, 의무, 정의, 봉사, 상생, 헌신, 희생, 배려, 소통, 나눔, 타협, 공존, 존중, 참여 등의 가치를 들 수 있다.<sup>34)</sup> 이 같은 미덕들은 그 자체로도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으며, 통일 정책을 비롯해 남북한의 통일 과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시민의식’(civic consciousness)은 ‘개인으로서가 아닌, 시민이라는 지위에서 요구되는 자질’, 즉 ‘시민(citizen)이 갖추어야 할 의식(ship)’으로도 불린다. 시민의식은 시민성(citizenship)에 수반하여 형성되는 시민으로서의 의식으로서 ‘시민정신’으로도 불린다.<sup>35)</sup> 시민성과 마찬가지로 시민의식 역시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지닐 수 있다.<sup>36)</sup> 근대 시민 혁명을 거치면서

28) 송경재, “국민인성진흥법의 안착을 위한 제언”, 국회입법조사처·중앙일보 공동학술회의 자료집, 2015, p. 7; 김현·송경재, 앞의 책, 2015, p. 7.

29) 송경재·채진원, 앞의 책, 2014, p. 12.

30) 송경재·채진원, 앞의 책, 2014, p. 66.

31) 이동수, “지구화시대 시민과 시민권: 무폐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21호, 2008.

32) 이동수·송경재·신두철·이성훈·주성수·채진원, 앞의 책, 2012, p. 11.

33) 이동수·송경재·신두철·이성훈·주성수·채진원, 위의 책, 2012, p. 12.

34) 이신애,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관계성 연구”, 2017 북한연구학회 추계학술회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교육의 과제』, 2017. 10. 20. p. 141; 송경재·채진원, 앞의 책, 2014, p. 66.

35) 김현·송경재, 앞의 책, 2015. p. 8.

36) 김왕근, “시민성의 내용과 형식으로서의 덕목과 합리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p. 13; 손경애·이혁규·육일남·박윤경, 앞의 책, 2010, p. 26; 김현·송경재, 앞의 책, 2015. p. 9.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자, 법 앞에 평등한 시민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정치적 의식으로서의 시민의식으로 이어졌다. 시민의식은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민주시민의식’의 형태로 발전했고, 이후 서구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경제적 측면의 의식으로까지 확장되어 ‘경제의식’ 또는 ‘자본주의 정신’으로 형성되어 나갔다.<sup>37)</sup>

현대 사회에서 시민의식에 대해서는 더욱 다양한 정의와 유형 분류가 존재한다. 일반적인 정의에 따르면 시민의식은 민주질서와 가치를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sup>38)</sup>이자 시민으로서 올바르게 견지해야 할 의식<sup>39)</sup>이며, 민주질서와 가치를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sup>40)</sup>을 의미한다. 로스(Ross)는 시민의식이란 참여와 자원봉사 및 모든 시민을 위해서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공동체 개선을 지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킴리카와 노만(Kymlicka and Norman)은 시민의식을 ‘법적 지위로서의 시민의식’과 ‘바람직한 시민의 활동으로서의 시민의식’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해 설명했다. ‘법적 지위로서의 시민의식’은 민주주의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시민으로서의 지위, 즉 국적 및 특정 국가에 대한 소속, 시민이 갖는 권리와 의무, 사회적 약자인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다. 반면 ‘바람직한 시민의 활동으로서의 시민의식’은 시민의 민주적 역량, 시민의 공적활동 능력과 책임감, 즉 시민의식과 시민으로서의 덕성, 그리고 시민의 참여 전반을 의미한다.<sup>41)</sup>

다양한 정의와 유형 분류에도 불구하고, 시민성 또는 시민의식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런 점에서 시민들의 시민성과 시민의식의 확립은 당연하고 있는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를 바람직한 방식으로 해결하게 할 수 있다. 나아가 오랜 동안 분단된 한반도 내에서 남북관계를 비롯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나 과제들을 시민의 책임감과 참여에 의거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2. 민주적 시민성과 시민교육

### 가. ‘민주적 시민성’ 의미 탐색

민주적 시민성의 ‘민주적’이라는 개념은 민주주의(democracy)에서 근원하는 것으로, 고대 아테네의 행정단위인 데모(demo)에 속한 사람들을 통칭하는 데모스(demos)에 의한 지배(cracy)를 뜻한다.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10여 개의 데모에서 시민의 자격이 인정된 사람들 중 50명씩을 무작위로 선출하여 약 500명으로 구성된 민회를 중심으로 운영된 정치체제였다.<sup>42)</sup> 근대의 민주

37) 박균열, “현대 한국의 시민의식 실태조사 내용체계와 향후 과제”, 『윤리연구』, 제93호, 2013, p. 7; 송경재·채진원, 앞의 책, 2014, p. 13.

38) 광미정·문신용, “시민의식 영향요인 연구”, 『시민사회와 NGO』, 제8권 제2호, 2010, p. 112

39) 송경재·채진원, 앞의 책, 2014, p. 13.

40) 광미정·문신용, 앞의 글, 2010, p. 112; 김현·송경재, 앞의 책, 2015, p. 8.

41) 최현, “시민권, 민주주의, 국민-국가 그리고 한국사회”, 『시민과 세계』, 제4호, 2003; 전선영, “지역시민의식 형성 영향 요인: 용인시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2호, 2011, p. 786; 김현·송경재, 앞의 책, 2015, p. 8.

42) 윤광일·오수웅·박가나, 『통일대비 남북한 주민대상 민주시민교육 커리큘럼』,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2016, p. 12.

주의는 귀족이나 부르주아(bourgeois) 등 소수의 전유물이긴 하였으나, 선천적인 권력이나 재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출에 의한 민주정의 형태였다. 즉 민주정은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가 동등한 상태에서 자기 입법과 자치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정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후 20세기에 들어서 참정권이 확대되고 보통선거권이 정착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존의 ‘시민’ 개념이 점차 ‘민주시민’의 의미로 확대되고 있다.<sup>43)</sup> 오늘날 ‘민주시민’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자치를 실현하면서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주권적 권위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sup>44)</sup>

버츠(R. F. Butts)는 ‘민주시민’이 지녀야 할 도덕적 가치로서 12개 항목을 제시하면서 이를 의무와 권리적인 측면으로 구분했다. 그가 제시한 ‘시민의 의무’들은 정의, 평등, 권위, 참여, 진실, 애국심이 있으며, ‘시민의 권리’로는 자유, 다양성, 사생활 존중, 절차 이행, 재산, 인권이 있다.<sup>45)</sup> 버츠는 이러한 ‘민주시민 12개 덕목’들이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유지시켜주는 기본적 가치라고 보면서, 이것이 민주적 시민성을 형성하기 위한 시민교육의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sup>46)</sup> 이 같은 민주시민의 도덕적인 가치들은 공동체와 타인을 향한 시민 개인의 의무로 기능하는 동시에, 시민들 상호 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함으로써 높은 삶의 질과 건강한 공동체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민주적 시민성의 덕목들은 성숙한 시민과 건강한 시민 사회의 중요한 가치 덕목일뿐 아니라, 통일을 이룸으로써 남북한 주민 모두가 누려야 할 통일의 미래상과도 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김리카(W. Kymlicka) 역시 민주적 시민성을 민주 시민의 기본 덕목들로 바라보면서, 공공정신(public spiritedness), 정의감(sense of justice), 관용(tolerance)과 배려(civility), 연대감을 그 내용으로 들고 있다. 그는 전제주의 체제의 신민과 달리 민주사회의 시민은 스스로가 공공생활의 주인이기 때문에 ‘공공정신’은 민주시민의 기본 덕목이 된다고 보았다. 민주 사회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만일 공적 담론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민주주의의 유지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 사회의 시민들은 각자를 자유롭고 평등한 동료로 인정해야 하며, 공적인 공간에서 자신의 정치적 요구를 정당화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 사회의 시민들은 단순히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공동체가 처한 문제를 공적인 안목에서 바라보고 판단하며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민주 사회는 “민주적 공동체의 주인이라는 의식과 태도와 행동을 지향하는 규범적 인간”<sup>47)</sup>을 양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민교육은 민주적 시민성을 지향해야 한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민주적 시민성’은 대부분 법이나 제도의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능 및 태도, 능력의 측면에서 바라본다.<sup>48)</sup> 민주적 시민성과 관련된 시민의 능력들로는 ① 기본적인 예절, 공공질서, 법질서 등 규범 준수 능력, ② ‘공동선’을 추구하면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③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능력, ④ 타인과 의사소통 및 대화와 토론 능력, ⑤

43) 윤광일·오수웅·박가나, 위의 책, 2016, p. 9.

44) 윤광일·오수웅·박가나, 위의 책, 2016, p. 15.

45) 김현·송경재, 앞의 책, 2015, p. 11.

46) 손경애·이혁규·옥일남·박윤경, 앞의 책, 2010, p. 27.

47) 윤광일·오수웅·박가나, 앞의 책, 2016, p. 19.

48) 윤광일·오수웅·박가나, 위의 책, 2016, p. 18.

대화와 토론에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능력, ⑥ 갈등 상황에서 타인과 타협할 줄 아는 능력, ⑦ 민주적 절차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등이 있다.<sup>49)</sup>

### 나. ‘시민교육’ 의미 탐색

일반적으로 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 원리와 제도를 이해하며 공동체의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및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교육은 기본적으로는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도록 하고, 시민 스스로가 삶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며, 그러한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규범 및 법 제도 등을 다룬다. 성숙한 시민사회는 법이나 제도로써만이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와 공공선(common good)을 추구하는 덕성(virtues)을 지닌 시민이 존재할 때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민의 덕성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만들어낸 사회적 산물이자 교육적 산물이다.<sup>50)</sup> 따라서 시민교육은 이 같은 시민적 덕성을 함양하고 촉진하기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시민교육은 시민들로 하여금 기본적 이념·가치·태도 및 행동양식을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책임 있는 국가 구성원들이 되도록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교육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진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sup>51)</sup> 따라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시민교육을 정치교육(political education)의 한 형태로 간주하면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민교육을 실시<sup>52)</sup>하고 있으며, 특히 서독의 경우 이러한 정치교육이 독일 통일을 이루는데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알몬드와 포웰(Almond and Powell)에 따르면 시민교육은 정치사회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마토렐라(Martorella) 역시 민주시민교육은 사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 사회가 지향하는 기본적인 이념과 가치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하며, 정치·사회체제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면서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했다. 코간(Cogan)은 시민교육의 영역을 세분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정체성, 권리 및 자격의식, 책임과 의무감, 참여의식, 사회적 가치 수용이라는 5가지 시민의식의 요소들을 제시했다.<sup>53)</sup> 코간이 제시한 시민교육의 5대 시민의식은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정규 교육과정뿐 아니라 성인 대상의 사회 시민교육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같은 요소들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성숙해지고 있다. 나아가 이는 시민들의 건강한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 결속을 증진하면서 정치·사회적 이슈들 및 남북한 통일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책임과 참여 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연구들의 경우 1990년대에는 주로 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sup>54)</sup>가 이루어졌고,

49) 강영혜·양승실·유성상·박현정, 『민주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1); 윤광일·오수웅·박가나, 앞의 책, 2016, p. 18.  
 50) 이동수·송경재·신두철·이성훈·주성수·채진원, 앞의 책, 2012, p. 49.  
 51) 김현·송경재, 앞의 책, 2015, p. 12.  
 52) 조찬래, “민주시민교육”,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13권 제2호, 2012, p. 74; 김현·송경재, 앞의 책, 2015, p. 2.  
 53) 김현·송경재, 앞의 책, 2015, pp. 11-12.  
 54) Cogan, J., *Citizenship for the 21st Centur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Education*, London: Kogan Page, 2000; 전선영, “지역시민의식 형성 영향 요인: 용인시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2호, 2011; 조찬래,

2000년대 이후에는 국내·외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시민교육에 대한 연구<sup>55)</sup>가 이루어졌다. 이후에는 시민교육 관련 법제화 과정 및 구체적인 국내·외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시민교육 모델을 개발해 실시하고자 하는 연구<sup>56)</sup>도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시민교육의 당위성을 넘어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논의와 연계해 시민교육을 다룬 연구도 생겨났다. 이에 따르면 올바른 시민의식은 사회발전을 위한 지속적이고 잠재적인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의식은 한 국가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자본 형성의 토대로서 시민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다.<sup>57)</sup> 시민교육의 범위도 점차 준법의식, 사회정의의식, 책임의식, 참여의식, 봉사의식, 평등의식, 그리고 세계시민의식에까지 확장되고 있다.<sup>58)</sup> 2015년 세계교육포럼 선언문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과 함께 ‘세계시민교육’을 강조하면서 범지구적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교육이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지닌다고 명시하기도 했다.<sup>59)</sup> 이 같은 시민교육의 외연 확장은 세계화, 다문화 추세 속에서 우리의 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데에도 의미를 지닌다.

#### 다. ‘민주시민교육’ 의미 탐색

오늘날 ‘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은 거의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시민교육은 민주시민교육 이외에도 서구에서 이데올로기 교육, 정치교육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프랑스에서는 시민교육을 ‘국가 이데올로기 교육’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으며, 시민교육이 자칫 교원들의 정치화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독일에서는 시민교육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식의 국가주의 교육으로 인식하면서 ‘정치교육’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으나, 그 내용상으로는 민주시민교육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교육에 대해 정치 체제나 권력 등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정치교육보다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서도 ‘민주시민(a democratic citizen) 양성’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sup>60)</sup> 더욱이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성 및 통일 대비 차원에서 고려할 때, 민주시민교육 용어가 더욱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넓은 의미에서

“민주시민교육”,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13권 제2호, 2012; 이규영, “독일의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국제지역연구』, 제9권 3호, 2005; 김태준·김안나·김남희·이병준·한준, 『사회적 자본형성의 관점에서 본 시민의식측정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3).

55) Ruminski, E., “독일 통일 후 정치재단의 민주시민교육”,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13권 제2호, 2012, pp. 109-120; 전득주, “미국의 시민교육: 그 배경, 현황 그리고 문제점”,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7호, 2002, pp. 41-65; 남경희, “일본의 학교 교육에서 시민교육의 추진 동향”, 『사회과교육』, 51권 2호, 2012, pp. 15-26; Martorella, P. H., *Teaching Social Studies in Middle and Secondary School*, New York: Macmillan, 1991.

56) 김현·송경재, 앞의 책, 2015, pp. 12-13.

57) Putnam, R.,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Schuster, 2000.

58) 지은림·선광식, “세계시민의식 구성요인 탐색 및 관련 변인 분석”, 『시민교육연구』, 제39권 제4호, 2007, pp. 115-134.

59) 김성수·신두철·유평준·정하운,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교육부 정책연구 보고서, 정책 2015, p. 1.

60) 윤광일·오수웅·박가나, 앞의 책, 2016, p. 17.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사회화’의 개념과 유사한데, 모든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적인 영향을 주는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자, 교육적인 지향성이나 의도성, 계획성 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좁은 의미의 민주시민교육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사회·정치 생활에 참여하기 위한 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의식적, 계획적, 조직적인 교육적 방책이며, 지속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모든 교육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즉 좁은 의미의 민주시민교육은 학교에서 사회과, 도덕·윤리과를 비롯한 교과 수업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61)</sup>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주권적 권위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sup>62)</sup>으로 정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선거연수원’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은 국민이 주권자로서 선거·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적 가치와 지식·능력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함양하는 것”이며,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sup>63)</sup>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주권적 권위와 참여능력 등 민주시민의 본질을 내포하고는 있으나 선거나 정치 과정에 한정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보다 확대된 정의로서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에서는 『민주시민생활용어사전』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이란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로서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현상에 관한 객관적 지식을 갖추고, 정치적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비판의식을 갖고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책임지는 정치행위가 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사회에서 습득하는 모든 과정”<sup>64)</sup>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의 교육 방향은 대체로 민주적인 정치 문화를 형성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및 정착에 기여하는 교육으로서의 방향을 지니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들이 민주적인 사회·정치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방향을 갖고 바람직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주요 내용들로는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 정치 체제의 안정을 위한 시민의 지지 형성, 정치 참여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의 획득, 주권자로서 국민의 지식과 비판적 능력의 배양<sup>65)</sup>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3. 민주시민교육의 전개와 과제

#### 가.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의 전개

우리나라에서 ‘시민’이라는 개념은 1945년 광복 이후 미군정 하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당시 미군정은 새로운 독립국가의 시민을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46년에 ‘사회생활과’를 도입했

61) 김성수·신두철·유평준·정하운, 앞의 책, 2015, p. 6.

62) 윤광일·오수웅·박가나, 앞의 책, 2016, p. 15.

63) 고선규, 『시민, 정치교육의 현황과 과제: 선거연수원 사례』, 선거연수원, 2015.

64) 윤광일·오수웅·박가나, 앞의 책, 2016, p. 16.

65) 김성수·신두철·유평준·정하운, 앞의 책, 2015, p. 10; 김현·송경재, 앞의 책, 2015, p. 12.

다. 이후 1948년에는 ‘민족적 민주주의 교육’이 제시되면서 준법정신과 애국심을 지닌 국민을 기르는 교육을 지향했지만, 6.25전쟁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도의교육, 반공교육이 강조됐다. 1955년에는 각급 학교 ‘교과과정’을 통해 “민주국가 사회의 공민으로서의 올바른 인간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기능, 태도를 개발함에 필요하고 기본적인 사항의 교수·학습”이 강조되면서, 제1차 교육과정의 사회과 교육에서는 반공·반일의 이데올로기 교육이 강조됐다. 제2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한국적인 사회과로의 성격이 요청되면서 1962년부터 ‘민주시민교육사업’을 실시했으나, 실제적으로는 반공이나 안보 등 이데올로기가 강조됐다. 1973년부터 제3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국적 있는 교육’을 표명하면서 반공·안보교육, 주체성 교육 등을 강조하는 국가 중심의 국민교육이 실시됐다.<sup>66)</sup>

1981년부터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개발 주체가 한국교육개발원으로 바뀌고 인간 중심 교육과정이 시도됐지만, ‘사회정화운동’과 국민정신교육 9대 덕목 등 이념, 사상교육 요소가 여전히 존재했다. 1987년 민주화를 배경으로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개념 및 원리학습, 탐구학습, 사고력 신장이 강조됐다. 그리고 1992년부터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국민적 자질’에서 ‘시민적 자질’로 사회과의 공식목표가 변화되고 ‘개인과 사회, 국가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로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인식’, ‘민주적 절차 및 과정의 숙달’, ‘기본 생활습관 및 질서의식의 내면화’,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의 함양’ 등이 강조됐다. 1990년대 이후에는 학계와 시민단체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연구가 활발해지고, 선거연수원, 통일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기구들의 민주시민교육도 등장했다. 2000년대에는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가 시도되고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및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가 강조됐다. 2009년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이 강조되고,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통합함으로써 체험위주의 창의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강조됐다.<sup>67)</sup> 이 같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강조점은 현행 2015 개정교육과정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초·중·고 교육과정 및 시민단체 등을 통한 사회 민주시민교육에서는 이 같은 민주시민교육의 주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양한 실천·체험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북한에서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에 기초한 북한의 교과목 및 조직생활을 통한 정치사상교양 전반에서 민주시민교육적 요소가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 입국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에도 특히 권리와 의무의 조화, 주권자로서의 비판적 능력 등에 대한 인식과 역량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나.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의 과제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이후 미국식의 민주주의를 수용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민주시민교육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정부 주도적인 정치

66) 김성수·신두철·유평준·정하운, 앞의 책, 2015, p. 16.

67) 김성수·신두철·유평준·정하운, 위의 책, 2015, p. 17.

교육의 형태로 실시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한 정치교육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민주교육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오늘날까지도 잔존하기도 한다. 1980년대 후반을 거치며 우리 사회에 민주화가 진척되고 시민사회가 성숙되면서 정부나 공공기관 뿐 아니라 시민단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이 늘어나고 있다.<sup>68)</sup>

1990년대에는 다양한 주체와 경로를 통해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령을 비롯해 제도화 노력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97년에는 경실련, 참여연대를 비롯해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교육 11개 단체가 ‘민주시민교육포럼’을 구성했다. 민주시민교육포럼은 정치적 독립성 및 시민단체의 독자적 활동 보장을 강조했고, 민주시민교육의 직접 실행보다는 다양한 시행주체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지녔다. 같은 해 설립된 학자들 중심의 ‘민주시민교육협의회’ 역시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령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후 민주시민교육포럼과 함께 2000년 1월 시민교육진흥법을 제출하기도 했다. 1999년에는 30여개의 단체로 구성된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가 민주시민교육관련법 제정을 위한 연대 활동을 하기도 했다.<sup>69)</sup>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교육의 법제화는 2000년 초반까지 결실을 얻지 못하고 시한이 흐르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후 2004년 말 ‘민주시민교육포럼’을 주축으로 한 시민단체의 법제화 노력이 다시 일어났고, 법안의 추진 주체를 보다 강화하면서 시민단체의 연대를 강조하면서 시민교육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사)바른사회 시민회의와 바른정치시민연합은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상정 추진을 하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연수원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원 설립을 위해 내부적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도 했다.

정부 역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일각에서는 기존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교과서 위주의 지식전수에 치중하는 측면이 있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비롯해 공동체적인 덕목이 부족하며, 학교교육과 학교 바깥의 체험 활동 프로그램들 간의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에 ‘체험과 실천을 중심으로 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sup>70)</sup> 이 같은 노력은 지자체나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루어졌다. 경기도는 2013년에 전국 시·도 교육청 중 최초로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였고,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강조하면서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sup>71)</sup>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시민교육 담당 기관들은 매우 다양한 실정이며, 각기 한계와 과제들을 지니고 있다. 먼저 공공기관들은 민주시민교육의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독립적이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반면 민간 민주시민교육기관에서는 정당, 종교단체, 노동단체, 경제단체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sup>72)</sup> 시민단

68) 이경희,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한국동북아논총』 제 54집, 2010, pp. 160-162.

69) 이동수·송경재·신두철·이성훈·주성수·채진원, 앞의 책, 2012, p. 57.

70) 김성수·신두철·유평준·정하운, 앞의 책, 2015, pp. 16-17.

71) 경기도교육청은 2013년에 초·중·고 대상 민주시민교육 교과서를 제작 배포해 2014년부터 학교 수업에 활용하고 있으며, 서울시, 광주시, 충남, 전북 교육청이 공동으로 교과서를 사용 중에 있다. 김성수·신두철·유평준·정하운, 위의 책, 2015, p. 18.

체에 의한 민주시민교육의 경우 다양한 내용과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미비하고 내용상의 체계성과 일관성, 조직 운영과 재정적 측면 등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sup>72)</sup>

#### IV. 통일 지향 민주적 시민성 함양 평생교육 프로그램 구축

##### 1. 프로그램의 성격과 지향

우리 민족은 근대적인 국가로 발전하기도 전에 먼저 일제 식민 지배를 경험해야 했고, 해방된 이후에도 민족의 분단과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었다. 남북한은 세계적인 냉전 추세를 배경으로 이념적으로 대립했고, 상이한 체제 하에서 70년에 걸쳐 서로 다른 발전 경로를 지나왔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 우리나라는 식민 통치 경험과 분단, 전쟁으로 인해 시민사회 형성이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교육의 확대와 경제 발전을 배경으로 민주화를 성취해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대한민국은 분단으로 인해서 다양한 이슈들에 있어서 여러 갈등 요소를 지니고 있다. 장기간의 분단 상황은 다양한 사고나 가치, 태도를 제약하는 요소가 되어 왔으며, 보다 성숙한 시민 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와 3대 세습, 조선노동당의 지배로 인해 주민들의 자유가 제한되고 각종 인권이 침해됐으며,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폐쇄적 대외구조로 인해 심각한 경제난을 경험해야 했다. 북한 주민들은 일생에 걸쳐 의무적인 조직 생활을 통해 집단주의 가치관을 내면화하고 정치사상교양과 노력 동원을 받아 왔다. 북한 주민들은 거주 이전이나 이동, 직업 선택과 같은 기본적인 자유를 비롯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들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도 갖지 못했다. 북한 당국은 남녀평등권법령을 비롯하여 다양한 평등의 가치를 주장해 왔으나, 실상은 김일성 일가를 비롯하여 출신 성분이 좋은 일부 계층들에 특권이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북한에서는 시민사회의 성립이 지연되어 왔고, 결국 북한 주민들은 자유를 비롯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비롯해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변혁하고자 하는 시민참여의식이나 실천 행위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상과 같이 오랜 분단, 그리고 남북한 간 체제와 생활세계의 이질화는 남북한 주민들의 시민 의식 형성과 시민사회 성립에 있어서도 많은 격차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북한 체제에서 살다가 국내에 입국해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에도 다양한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북한 체제와는 상이한 남한 사회에 정착하고 적응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정착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관념이나 인권을 비롯하여 양성평등과 준법을 비롯한 시민으로서의

72) 김성수·신두철·유평준·정하운, 위의 책, 2015, p. 7.

73) 이경희, 앞의 글, 2010, pp. 160-162.



권리와 책임 인식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다양한 연구들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특히 사회 변혁을 위한 시민참여나 시민 불복종 등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자기효용성 역시 상대적으로 낮게 드러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탈주민들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신념, 시민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상적 향유, 그리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참여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시민교육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나아가 ‘먼저 온 통일’로서의 북한이탈주민들의 사례는 통일 이후 특별히 북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

한편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정당과 이익집단 등의 의견과 요구가 자유롭게 표출되는 다원주의적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내부의 통일 관련 정책과 접근법 등에 있어서도 다양한 견해와 주장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통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도 관용, 공존, 참여, 배려를 비롯한 다양한 민주시민의 덕성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성취한 독일의 경우에도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담고 있는 독일식의 ‘정치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의식을 확립한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남북한의 통일 역시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민주적 시민성의 함양은 통일을 이루기 위한 시민들의 의식과 참여를 더욱 성숙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일뿐 아니라 통일을 이룩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밖으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내걸고 있으며, 헌법 제4조에서도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하고 있다. 1999년에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에서도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고 밝히고 있다. 통일교육의 세부 목표에서도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민족공동체 의식에 바탕을 둔 새로운 민족공동체로 발전해가는 창조적인 과정으로 미래 지향적 통일관 정립”을 추구하고 민주적 시민의식 함양을 중시하고 있다.

통일을 지향하는 민주적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은 남북 지역 어느 한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관점을 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바람직한 통일 지향 민주적 시민성 함양 교육은 먼저는 장기화되고 있는 분단의 폐해를 인식하고,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을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극복할 수 있기 위한 정신적 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분단 현실에 대비하여 통일 이후의 미래상을 떠올리면서, 통일 비전과 각 개인의 삶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 개인의 통일여지의 각성을 촉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통일여지를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방식으로 표출하기 위한 역량을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이 같은 통일여지를 공유한 구성원 간 의식과 실천에 있어서의 참여와 연대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상호 소통과 공감, 배려, 관용, 존중 등의 민주시민으로서의 덕성과 의식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통일 지향 민주적 시민성 함양 교육은 정규 학교 교육과정을 비롯한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방식으로는 충분한 교육 효과나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사회의 급속한 변화,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 및 세계화를 거치면서, 사회 구성원 간에는 세대 경험의 차이와 이로 인한 세대간 통일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통일과 같은 거대한 사회적 변화는 모든 연령의 사회 구성원의 현재와 미래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다. 즉 통일은 한 개인이나 일부의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사회 구성원의 전체의 연대와 결속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남북한의 통일은 일부가 아닌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인식과 역량이 효과적으로 결집될 때 가장 바람직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들로르 보고서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과 같은 평생교육의 관점들은 남북한의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런 점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민주적 시민성 함양 교육은 전 생애, 전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의 지향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 2. 프로그램 유형과 주안점

여기서는 통일을 지향하는 민주적 시민성 함양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유형 및 설계에서 유의할 점을 몇 가지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통일교육 참여자의 수요, 즉 교육 참여 동기를 파악하고 이에 맞추어 수요자 요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 전반을 고르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 특별히 통일교육원 내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앞서 호울(Houle)이 언급한 바와 같이 성인교육자들은 명시적 목표지향적 학습동기, 활동지향형 학습동기, 학습지향형 학습동기 등 다양한 참여 동기 유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참여 동기 유형은 교장·교감 등의 관리자, 유·초·중·고 교사, 예비교사와 통일·북한학 전공 차세대 전문가, 통일교육 전문 강사, 군인·경찰·공무원, 글로벌 전문가 등 다양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동기 유형 또한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수립한 특정한 목적이나 욕구 충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연수 활동 자체 및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으며, 통일과 북한과 관련한 배움과 지식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점에서 통일교육 프로그램 역시 다양한 참여 동기에 적합성을 지니는 형태로 추진하며, 교육생의 선택형 프로그램을 증대할 필요도 있다.

또한 통일을 지향하는 민주적 시민성 함양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원내 집합교육 뿐 아니라 대학이나 평생교육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들과의 연계를 고려해 설계할 필요도 있다. 즉 현행 시민참여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취하고 있는 시민책무성 프로그램, 시민 리더 역량 프로그램, 시민 참여 활동 프로그램 등을 참고하여 상호 연계 가능한 형태로 개발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시민참여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를 기준으로 이를 통일교육에 연계한 프로그램 구상을 정리하면 다음 <표 1>와 같다.

〈표 1〉 시민참여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예시)

시민참여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민참여교육 평생교육 내용	시민참여교육 평생교육 연계 통일교육 프로그램 내용(예시)
1. 시민책무성 프로그램 * 현대 시민의 사회적 책무성 개발 프로그램 * 사회 통합 및 공동체 형성을 촉진, 지원, 인증 프로그램	* 인권 * 양성 평등 * 다문화 이해 * 환경·생태 * 주민 자치 * 지역 및 국가정책 이해	* 북한 인권의 이해 교육 * 통일과 양성평등교육 * 글로벌 통일 미래 비전 함양 교육 * DMZ 생태 체험 이해 교육 * 통일협약 및 통일 후 모의 자치 활동 * 통일 후 한반도 이해교육
2. 시민 리더 역량 프로그램 * 공동체의 다양한 공익적 활동 및 사업을 추진할 시민 발굴·육성 * 시민들의 자질과 역량 개발·인증 프로그램	* 지역사회 리더 양성 * 평생학습 리더 양성 * 평생학습 관련 상담자 양성 * 지역사회 역사·문화 해설사 양성	* 지역사회 통일리더양성 * 멘토링 등 통일교육 리더양성 * 탈북민 등 통일 관련 상담자 양성과정 * 통일 한반도 지역 역사문화 이해과정
3. 시민 참여 활동 프로그램 * 지역사회 사업 및 지역 조직에 개인·집단 차원의 참여 촉진 * 지역사회 평생학습 참여 지원 프로그램	* 학습동아리 활동 * 평생교육 자원봉사 *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동	* 통일 학습동아리 활동 * 통일 자원봉사 * 통일교육 학습네트워크 활동

이를 정리하면 첫째, ‘시민책무성 프로그램’을 통일교육과 결합할 경우 통일교육과 인권교육을 연계한 북한 인권의 이해 프로그램, 통일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을 연계한 여성 대상 프로그램, 통일교육과 다문화이해 교육을 연결한 글로벌 통일 미래 비전 함양 프로그램, 통일교육과 환경 생태체험강좌를 연계한 DMZ 이해 교육, 통일교육과 주민자치교육을 연계한 통일협약 및 통일 후 모의 자치 활동, 통일교육과 지역이해교육을 연계한 통일 후 한반도 이해교육 등을 예시로 구상해볼 수 있다.

둘째, ‘시민리더역량 프로그램’의 형태를 취하여 통일교육을 연계할 경우, 중앙 및 지역사회의 통일 리더를 양성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지역사회 통일리더양성, 멘토링 등 통일교육 리더양성, 탈북민 등 통일 관련 상담자 양성과정, 통일 한반도 지역 역사문화 이해과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시민 참여 활동 프로그램’을 통일교육과 연관 지을 경우에는 지역사회 통일의지 고양을 위해 개인적·집단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통일 관련 강연, 체험 등의 통일교육 참여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통일학습동아리 활동, 통일 자원봉사, 통일교육 학습네트워크 등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구상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통일을 지향하는 민주적 시민성 함양 프로그램 체계는

평생교육의 유형 분류를 참조해 새로운 체계를 수립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다양한 평생교육 유형 중 남북한 통일에 있어서 의미 있는 내용들로서, 평생교육을 ‘내용 범주’와 ‘효과 범주’의 두 기준으로 유형화하고 또다시 개인과 사회의 영역으로 구분하는 관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평생 교육 프로그램 유형들은 ‘개인 소비형’ 프로그램, ‘개인 개발형’ 프로그램, ‘사회 참여형’ 프로그램, ‘사회 적응형’ 프로그램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개인 소비형’ 프로그램은 일반 시민으로서 흥미와 관심을 표현하고 충족할 수 있는 여가 스포츠, 취미, 생활 중심의 자유 교양 프로그램으로서, 개인의 시간과 재정을 활용하여 배움의 즐거움을 향유하고 삶의 수준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둘째, ‘개인 개발형’ 프로그램은 학습자가 사회적 존재로서 안정적 삶을 영위하고 잠재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 자기능력 개발 프로그램이다. 셋째, ‘사회 참여형’ 프로그램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소속된 조직이나 지역사회에 대해 학습자의 의식적 각성과 실천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집단현안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이해 증진, 적극적 참여 유도. 각종 시민 단체를 통해 사회체제 개선 및 개혁에 초점을 둔다. 넷째, ‘사회 적응형’ 프로그램은 직업과 관련하여 개인 업무 수행 수준의 증진 지원, 지속적 고용 가능성 신장 프로그램, 경제적 가치 창출을 돕는 직업훈련, 직무연수, 기업교육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현 사회체제 구조적 조건하에서 안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여러 설문 결과 등에서 발견되는 바와 같이 분단 속에서 70년 이상 살아오면서 분단에 점차 무감각해지고 있고 있는 우리나라 구성원들의 인식 현실을 감안해, 통일을 지향하는 민주적 시민성 함양 프로그램을 생활 속에서 친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자유 교양 프로그램’의 형태로 구축하고자 한다. 둘째, 통일교육원을 비롯해 많은 통일교육 연수 대상들은 공무원, 교사, 시민단체를 비롯해 대학생, 재외동포, 유학생에 이르기까지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성인 학습자 특유의 학습 방식을 추출하고 이에 적합한 방식으로 통일교육과 관련된 지식, 기술, 태도 등 자신의 역량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 주도성 함양 프로그램’으로 구축할 것이다. 셋째, 현대 사회로 오면서 사회적 갈등의 양상이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현실을 고려해, 일상 속에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구체적인 실천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참여 역량 증진 프로그램’의 형태로 개발할 것이다. 넷째, 급변하는 기술·매체 속에서 어느 누구도 공식적 학교 교육 과정만으로는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음을 감안해, 각 직능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이것이 자신의 가치와 역량을 현실적으로 증진할 다양한 이수증 및 수료증 형태로 이어지는 ‘훈련형 프로그램’을 구축하고자 한다.

### 3. 4개 유형별 프로그램 개발(안) 예시

#### 가. 자유 교양 프로그램

주제: “오감(五感) 만족 유니테인먼트(Uni-tainment) 활동 프로그램”

##### 1) 프로그램 개요

- \* 통일에 무관심한 세대 및 계층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은 개인의 흥미와 관심에 입각해야 하며, 또한 개인적 관심사 및 일상적 생활세계와 부합해야 한다. 또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일방향적인 강연 형태를 벗어나, 개인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체험 활동을 접목하여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 \* 이런 점에서 통일교육 역시 취미나 여가 활동을 비롯한 자유 교양 활동 프로그램의 형태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활동 과정에서 개인들은 통일교육의 즐거움을 향유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통일과 북한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

##### 2) 내용 및 주요 활동 (선택형 프로그램)

###### ① 세션 1: “내가 그리는 통일 스토리” <오감(五感) 만족: 눈>

- \* [집단] 통일기원 협동화(판화, 벽화, 마인드맵): 분임원 전원의 토론을 통해 그림 주제(통일 비전, 통일 한반도 발전, 통일 한국 위상 등)를 정하고, 협업 형태로 제작한 뒤 전시, 발표
- \* [집단] 통일 상상화(칼라타일) 퍼즐: 개인이 그린 통일 상상화 그림 조각(정사각형)을 분임별로 모아 스토리가 담긴 퍼즐 형태로 전시, 발표
- \* [2인] 통일나비 데칼코마니: 도화지를 반으로 나누어 각기 자신이 꿈꾸는 통일 이미지(나비 등)를 물감으로 채색 후 반으로 겹쳐 2인 합동으로 완성된 데칼코마니 작품 발표
- \* [개인] 통일 스탬프(도장) 제작 및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통일의 꿈을 담은 자신만의 ‘문구’와 이름, 날짜 등을 담아 조각(석고, 지우개, 감자 등)하여 이를 에코백에 찍어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도록 함.

###### ② 세션 2: “이심전심(以心傳心), ‘몸’으로 표현하는 통일” <오감(五感) 만족: 몸>

- \* [개인] 바디랭귀지 통일 골든벨: 통일 및 북한 관련 대주제 5~8개별로 스피드 바디 퀴즈 실시, 우승자 시상
- \* [집단] 통일스토리 콩트: 분임별로 통일 후 생겨날 수 있는 가상 상황(남남북녀의 결혼생활, 남북한으로의 전학이나 전근, 말투의 차이나 오해 등을 극복하는 스토리 등)을 토론하여 설정한 후, 전원이 참여하는 상황극 실행
- \* [집단] 통일 이야기 손 율동: 분임별 토론을 통해 노래와 가사 개사, 손동작 등을 결정하고, 분임원 전원이 손장갑 등을 끼고 손 율동 공연

③ 세션 3: “함께 나눠요, 한반도 통일 향기” <오감(五感) 만족: 코>

- \* [집단] ‘향기 나는 통일한국’ 석고방향제 만들기: 분임별로 토론을 통해 석고 모양(한반도 모양, 비둘기 모양 등)과 선호하는 향기 등을 결정한 뒤 분임원 전원의 채색 등을 통해 석고 방향제 공동 제작
- \* [집단/개인] 통일향기용품 만들기: 통일 문구(리본, 조각 등)를 넣어 다양한 향기용품(아로마 오일을 넣은 고체향수, 디퓨저, 향콘, 향스틱, 비누 등)을 제작해 주변에 선물하도록 함.
- \* [개인] 통일기원 향초 만들기: 자신이 선호하는 향기를 담아 파라핀 조각 및 통일 문구 등을 새겨 향초 완성

④ 세션 4: “맛있는 통일 이야기” <오감(五感) 만족: 입>

- \* [집단] 통일 로고 케익: 분임별로 통일 문구 및 케익 모양 등을 토론하여 결정한 뒤 공동 제작하고, 인기 투표를 통해 우수 케익 분임을 시상 후 분임별로 다과회 실시
- \* [집단] 통일 모듬 떡(과일) 산적(또는 풍류): 서로 다른 색상과 종류의 떡이나 과일 등을 조화롭게 구성하여 통일 이후의 화합을 상징하는 산적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인기 투표를 통해 우수 산적 분임을 시상 후 분임별로 다과회 실시
- \* [집단/개인] 통일 과일(야채)조각: 개인 또는 분임별로 수박, 참외, 멜론, 사과, 배, 당근, 감자 등의 껍질을 이용해 통일 관련 주제로(한반도 그림, 통일 문구) 조각하거나 모양내어 썰기
- \* [개인] 커피 라떼 아트: 통일 문구 또는 한반도 등으로 커피 표면에 장식하여 라떼 아트 실시

⑤ 세션 5: “흥겨운 통일 공연” <오감(五感) 만족: 귀>

- \* [집단] 통일연주 공연(잼, JAM): 통일 관련 노래를 다수의 연주자가 자유 연주 방식으로 공연 실시
- \* [집단] 재활용품 난타: 분임별로 토론을 통해 노래를 선정하고, 분임원 전원이 참여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활용품을 활용해 통일 노래에 맞춰 난타 공연
- \* [집단/개인] 통일 노래 경연대회(랩, 나레이션, 아카펠라, 피처링)

3) 교육 일정표(예시): 자유교양 2박 3일 프로그램 (선택형 프로그램)

“오감(五感) 만족 유니테인먼트(Uni-tainment) 활동 프로그램”

일차	시간	내용	주요활동
1일차	13:30~14:00	등록	
	14:00~15:00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안내 및 마음 열기 활동
	15:00~17:30	<오감(五感) 만족: 눈> “내가 그리는 통일 스토리”	* [집단] 통일기원 협동화(판화, 벽화, 마인드맵) * [집단] 통일 상상화(칼라타일) 퍼즐 * [2인] 통일나비 데칼코마니 * [개인] 통일 스탬프(도장) 제작 및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17:30~19:00	석식	
	19:00~22:00	<오감(五感) 만족: 몸> “이심전심(以心傳心), ‘몸’으로 표현하는 통일”	* [개인] 바디랭귀지 통일 골든벨 * [집단] 통일스토리 콩트 * [집단] 통일 이야기 손 울동
2일차	07:30~09:00	조식	
	09:00~11:30	<오감(五感) 만족: 코> “함께 나눠요, 한반도 통일 향기”	* [집단] ‘향기 나는 통일한국’ 석고방향제 만들기 * [집단/개인] 통일향기용품 만들기 * [개인] 통일기원 향초 만들기
	11:30~13:00	중식	
	13:00~15:00	<오감(五感) 만족: 입> “맛있는 통일 이야기”	* [집단] 통일 로고 케익 만들기 * [집단] 통일 모듬 떡(과일) 산적(또는 풍류) 만들기 * [집단/개인] 통일 과일(야채)조각 * [개인] 커피 라떼 아트
	17:30~19:00	석식	
	19:00~22:00	<오감(五感) 만족: 귀> “흥겨운 통일 공연”	* [집단] 통일연주 공연(잼) * [집단] 재활용품 난타 * [집단/개인] 통일 노래 경연대회(랩, 나레이션, 아카펠라, 피처링)
3일차	07:30~09:00	조식	
	09:00~11:00	조별 전시회 및 시상식	우수 작품 전시회 및 종합 시상식 실시
	11:00~11:30	설문조사 및 마무리	
활용 방안			* [원내교육] 예비교사반, 유치원교원반, 초등교사반, 중등교사반(중학교 자유학기제 등에 활용), 연구학교 교사반 등, 글로벌(재외동포, 유학생반 등) * [학교] 통일리더캠프(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 통일교육주간 특별캠프활동 등, 통일 교육 체험경비지원사업, 선도대학사업(대학별 캠프 활동 등) * [사회] 지역통일교육센터 자체 사업 등에 활용, 전국 통일관 연계 및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등과 협업 가능

## 나. 자기주도성 함양 프로그램

주제: “시서화(詩書畫)를 통한 ‘통일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 1) 프로그램 개요

- \* 통일교육 연수 대상들은 초·중·고 학생들뿐 아니라 공무원, 교사, 시민단체, 대학생, 재외동포, 유학생 등 다양하다. 특별히 성인 학습자들의 경우 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을 벗어나 자신이 몸 담고 있는 대학교나 일터, 가정 및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사회적 공간에서 각기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지니고 있다.
- \* 이런 점에서 성인 학습자 대상의 통일 교육은 각 개인의 삶의 공간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적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인 학습자 특유의 자기 주도적 방식을 강조하는 가운데, 자신의 사회적 공간 내에서의 리더십 함양과 연계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2) 내용 및 주요 활동 (선택형 프로그램)

#### ① 리더십 함양 특강

- \* [특강] 역사에서 배우는 21세기 리더십

#### ② 통일 문학과와의 만남 <시서화(詩書畫): 글>

- \* [개인/집단] 통일 문학 감동 문구 카드(책갈피) 만들기

#### ③ 나만의 통일 슬로건 <시서화(詩書畫): 글>

- \* [개인/집단] 통일 슬로건 캘리그래피 부채(액자) 만들기: 통일 격언, 로고, 카피 등을 참고하거나 패러디해 통일 리더로서 사용할 슬로건을 손글씨나 캘리그래피 형태로 부채나 액자 등으로 제작하기

#### ④ 탈북 화가(또는 작품)와의 만남

- \* [개인/집단] 탈북 화가(또는 작품)와 관련된 개인/집단별 질문사항 정리

#### ⑤ 통일 한반도를 그리다 <시서화(詩書畫): 그림>

- \* [집단] 통일 상상화 협동 그림 지도 만들기: 분임별로 그림 지도 계획을 수립한 뒤 역할을 분담하여 남북한의 자연지리, 인문지리가 담긴 그림 지도 제작, 전시

#### ⑥ 시와 그림의 만남 <시서화(詩書畫): 그림>

- \* [개인/집단] 통일 색종이 퍼즐: 개인별로 자신이 생각하는 통일 이미지(통일은 ○○이다 등)를 색종이 혹은 칼라 테라피 카드 뒷면 등에 작성하고, 분임별 또는 전체 집단 단위로 모아 퍼즐처럼 전시



\* [집단] 협동 시화 족자 만들기: 분임별로 통일 문구(또는 3행시 등)를 지은 뒤, 이를 전지 혹은 화선지 등에 서예와 수묵화 등을 활용해 족자 형태로 시화 제작, 전시

⑦ 통일 시인의 길 <시서화(詩書畫): 시>

\* [개인/집단] 주제별 통일 기원 10행시 경연대회: 5~10개의 대주제별로 자신이 선호하는 주제에 따라 지은 시를 포스트잇에 적어 게시한 뒤, 인기 투표를 통해 수상작 선정

\* [집단] 협동시 문예전: 분임별로 주제 및 방향 등을 토론하고 각자의 시상 등을 나누면서 분임 공동의 시를 지어 전지 등에 게시

3) 교육 일정표(예시): 자기주도성 2박 3일 프로그램 (선택형 프로그램)

“시서화(詩書畫)를 통한 ‘통일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일차	시간	내용	주요활동
1일차	13:30~14:00	등록	
	14:00~15:00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안내 및 마음 열기 활동
	15:00~17:30	리더십 함양 특강	* [특강] 역사에서 배우는 21세기 리더십
	17:30~19:00	석식	
	19:00~22:00	<시서화(詩書畫): 글> 통일 문화과의 만남	* [개인/집단] 통일 문학 감동 문구 카드(책갈피) 만들기
2일차	07:30~09:00	조식	
	09:00~11:30	<시서화(詩書畫): 글> 나만의 통일 슬로건	* [개인/집단] 통일 슬로건 캘리그래피 부채(액자) 만들기
	11:30~13:00	중식	
	13:00~14:30	탈북 화가(또는 작품)와의 만남	* [개인/집단] 탈북 화가(또는 작품)와 관련된 개인/집단별 질문사항 정리
	14:30~17:30	<시서화(詩書畫): 그림> 통일 한반도를 그리다	* [집단] 통일 상상화 협동 그림 지도 만들기
	17:30~19:00	석식	
	19:00~22:00	<시서화(詩書畫): 그림> 시와 그림의 만남	* [개인/집단] 통일 색종이 퍼즐(통일은 ○○이다 등) * [집단] 협동 시화 족자 만들기
3일차	07:30~09:00	조식	
	09:00~11:00	<시서화(詩書畫): 시> 통일 시인의 길	* [개인/집단] 주제별 통일 기원 10행시 경연대회 * [집단] 협동시 문예전
	11:00~11:30	설문조사 및 마무리	
활용 방안		* [원내교육] 예비교사반, 유치원교원반, 초등교사반, 중등교사반(중학교 자유학기제 등에 활용), 연구학교 교사반, 전문강사반, 특별반(강북구 학교 및 지역주민 대상) * [학교] 통일 글짓기 대회 등에 활용 가능(통일 상상화, 통일 시화전), 통일리더캠프(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 통일교육주간 특별캠프활동 등, 통일교육 체험경비지원사업, 선도대학사업(대학별 캠프 활동 등) * [사회] 지역통일교육센터 자체 사업 등에 활용, 전국 통일관 연계 및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등과 협업 가능	

## 다. 참여 역량 증진 프로그램

주제: “풀뿌리 통일시민’ 지역사회 학습 동아리”

### 1) 프로그램 개요

- \* 오늘날과 같은 사회적 갈등의 다양화와 복잡화를 고려할 때, 통일교육 역시 다양한 접근 방식이 요청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함께 지역 주민의 관심 및 눈높이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통일교육적 접근 또한 지역사회별로 특화된 접근이 필요해지고 있다.
- \* 이런 점에서 통일의 문제를 국가와 민족 등 거시적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신이 속한 지역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할 때 통일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과 참여 의지 또한 증진될 수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눈높이에 입각한 다양한 통일 논리를 구현하기 위한 지역사회 학습 동아리를 통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사회 친화적인 통일 문제에 대한 의식적 각성을 촉진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참여 역량을 증진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2) 내용 및 주요 활동

#### ①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 \* 교육대상자 특성에 따라 해당 지역사회 거주민 또는 유사 직능별 탈북 강사 초빙

#### ② 특강과 실습 1: 갈등 해소

- \* 특강: 갈등 해소(갈등해결, 갈등 중재)의 이론과 실제
- \* 조별 실습: 마음의 거리 좁히기
- \* 고정관념 극복, 배려, 공감, 책임, 신뢰, 관용을 실천하기 위한 분임 토론

#### ③ 특강과 실습 2: 통일공동체 협약

- \* 특강: 독일 통일의 교훈과 보이텔스바흐 협약(Beutelsbacher Konsens)<sup>74)</sup>

74) 이 합의는 궁극적으로 독일 정치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오늘날 민주적 정치교육의 기본원리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세 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화 또는 주입식 교육 금지: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생각에 따라 학생들을 조정함으로써 이들이 자주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방해해서는 안 된다. 바로 여기에서 정치교육과 교화 사이의 경계선이 그어진다. 교화는 민주 사회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 그리고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교육목표, 즉 학생의 자율성과 상반된다. 2. 정치적 논쟁과 학문적 논쟁의 지속: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 있어서도 역시 논쟁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 요구사항은 1)항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상이한 입장들이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 선택가능성들이 은폐되고, 대안들이 언급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되면 교화 또는 주입에의 길을 걷게 되기 때문이다. 3. 정치적 관심사의 관찰과 해결 능력 배양: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이익의 상황을 고려할 수 있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 상황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정치교육은 추상적이거나 공허한 내용을 다룰 게 아니라 배우는 사람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어야 한다. 학습자의 실제 삶의 조건과 이익 및 경험과 기억과 연관되는 내용들이 교육 내용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

- \* 조별 실습: 통일공동체 협약 만들기
- \* 조별 토론: 지역사회 및 학교, 일터, 가정 등에서 ‘열린 통일 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모색

④ 사례 발표와 토론

- \* 사례발표: 통일 학습 동아리, 봉사 동아리, 멘토링 등
- \* 조별 토론: 지역사회, 학교, 일터 단위 통일 학습 동아리 실현 모색(통일 독서 모임 및 토론 등), 탈북민과 함께 하는 대학생 및 지역주민 봉사 동아리, 탈북 청소년 멘토링 활성화 방안 모색

⑤ 조별 공연 ‘먼저 온 통일스토리’

- \* 탈북민 정착 사례 및 통일 이후 상황을 중심으로 한 공연 실시: 손인형극, 합창, 상황극, 연주 등 분임별 통일 음악 공연

⑥ 특강과 토론

- \* 특강: 통일 미래 비전
- \* 조별 토론: 사회문화적 통합 증진 방안(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해 요청되는 사항 논의, 통일 문화 확산을 위한 재능기부 결단

---

다. 학생들의 정치적 주체화를 보조할 수 있는 교육이야말로 정치교육의 진정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오기성, “통일교육에 관한 사회적 합의 제고 방안”, 2017 북한연구학회 추계학술회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교육의 과제』, 2017. 10. 20, pp. 8-9.

3) 교육 일정표(예시): 참여 역량 2박 3일 프로그램

“풀뿌리 통일시민’ 지역사회 학습 동아리”

일차	시간	내용	주요활동
1일차	13:30~14:00	등록	
	14:00~15:00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안내 및 마음 열기 활동
	15:00~17:30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 교육대상자 특성에 따라 해당 지역사회 거주민 또는 유사 직능별 탈북 강사 초빙
	17:30~19:00	석식	
	19:00~22:00	* 특강: 갈등 해소 * 조별 실습: 마음의 거리 좁히기	* 갈등해소(갈등해결, 갈등 중재)의 이론과 실제 * 고정관념 극복, 배려, 공감, 책임, 신뢰, 관용을 실천하기 위한 분임 토론
2일차	07:30~09:00	조식	
	09:00~11:30	* 특강: 독일 통일의 교훈과 보이텔스바흐 협약 * 조별 실습: 통일공동체 협약 만들기	* 특강: 독일 통일의 교훈과 보이텔스바흐 협약 * 조별 토론: 지역사회 및 학교, 일터, 가정 등에서 ‘열린 통일 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모색
	11:30~13:00	중식	
	13:00~17:30	* 사례발표: 통일 학습 동아리, 봉사 동아리, 멘토링 등 * 조별 토론: 통일 동아리 등 활성화 방안 모색	* 지역사회, 학교, 일터 단위 통일 학습 동아리 실현 모색(통일 독서 모임 및 토론 등) * 탈북민과 함께 하는 대학생 및 지역주민 봉사 동아리 * 탈북 청소년 멘토링 활성화 방안 모색
	17:30~19:00	석식	
	19:00~22:00	조별 공연 ‘먼저 온 통일스토리’	탈북민 정착 사례 및 통일 이후 상황을 중심으로 한 공연 실시: 손인형극, 합창, 상황극, 연주 등 분임별 통일 음악 공연
3일차	07:30~09:00	조식	
	09:00~11:00	* 특강: 통일 미래 비전 * 조별 토론: 사회문화적 통합 증진 방안	* 특강: 통일 미래 비전 * 조별 토론: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해 요청되는 사항 논의 * 통일 문화 확산을 위한 재능기부 결단
	11:00~11:30	설문조사 및 마무리	
활용 방안		* [원내교육] 지자체 공무원반, 시민단체(종교단체 등)반, 통일미래기획과정, 전문과정반(차세대 전문가 양성, 전문강사반 등), 예비교사반(대학생반), 중등교사반(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등), 연구학교 교사반 * [학교] 선도대학사업(대학별 캠프 활동 등), 통일리더캠프(고·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 통일교육 체험경비지원사업 * [사회] 지역통일교육센터 자체 사업 등에 활용, 전국 통일관 연계 및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등과 협업 가능	

## 라. 훈련형 프로그램

주제: “차세대 통일 시민 리더 과정(단기)”

### 1) 프로그램 개요

- \*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는 공식적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 일생에 걸친 평생 학습적 시도가 필요하며, 이는 통일과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통일이 가져올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예측하고 이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 및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은 공식적 학교 교육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 \* 이런 점에서 통일 시대의 핵심 세대이자 통일의 리더가 될 ‘차세대’들에 대한 통일 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청소년기 뿐 아니라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은 가치 주입과 같은 방식을 벗어나 자기 주도적 학습과 토론, 문답, 글쓰기, 실습, 발표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 2) 내용 및 주요 활동

#### ① 특강 및 실습 1: 통일 정책

- \* 특강: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 한반도 통일 환경, 남북관계 이해
- \* 조별 토론: 통일 관심 제고 방안, 통일 환경 전망
- \* 조별 실습: 통일 정책 홍보 및 통일 관심 증진을 위한 카드 뉴스 만들기

#### ② 특강 및 실습 2: 북한 동향

- \* 특강: 북한 동향
- \* 조별 토론: 분임원들의 토의를 통해 관심 있는 북한 분야 설정 및 자기 주도적 학습(플립드 러닝)
- \* 조별 실습: 토론을 통해 정리된 질의사항을 활용해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식(하브루타 질문 학습)

#### ③ 특강 및 실습 3: 독일 통일 (또는 통일 교육)

- \* 특강: 독일 통일의 교훈(‘독일문제에 관한 교육지침’<sup>75)</sup> 관련 내용 포함)

75) ‘독일문제에 관한 교육지침’은 1978년 11개 서독 주 문교부장관들의 상설협의회(KMK, Kultusminister Konferenz)에서 발표한 문서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독일문제는 동시에 유럽문제이다. 2. 동서독 관계의 발전은 평화 지향적인 정책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3. 독일의 분단은 여러 가지 원인을 가지고 있다. 4. 민족적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정당하다. 5. 역사적 유산에 대한 책임은 독일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관계된다. 6. 국경선 양편에 살고 있는 독일인들은 공통된 역사, 언어, 문화를 통해 계속되어 있다. 7. 독일의 국민들은 공동 국가를 갖고 있지 않지만, 하나의 공동 국적을 갖고 있다. 8. 동독의 체제와 서독 사회질서와의 비교는 기본법에 제시되어 있는 가치척도에 따라 이루어진다. 9. 동독에 있는 독일인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며 인도주의적 의무이다. 10. 인권에 대한 요구는 결코 내정간섭이 아니다. 11. 동독은 서방의 영향력에

- \* 조별 토론: 남북한 문제에 관한 교육지침 관련 토론하기
- \* 조별 실습: '남북한 통일 교육 지침' 또는 '통일 시민 강령' 만들어보기

④ 특강 및 실습 4: 통일 글쓰기

- \* 특강: 마음을 움직이는 통일 글쓰기(신문기사, 칼럼, SNS, 블로그 등)
- \* 사례 발표: 대학생 통일기자단 우수 사례 발표
- \* 조별 실습 활동: 통일 신문, 통일 뉴스, 통일 블로그 또는 통일 이후를 상정한 모의 신문 또는 방송기사 만들기

⑤ 토론 및 실습: 탈북민과의 대화와 '하나 되기'

- \*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조별로 진행
- \* 조별 토론: 학교, 일터, 지역사회 단위로 사회통합 증진 방안
- \* 조별 실습: 마음의 통합을 위한 '하나 되기' 매뉴얼 만들기

⑥ 발표 및 시상: 실습: 차세대 통일 시민 리더

- \* 조별 발표: 가정, 학교, 일터, 마을 단위 '통일의지' 확산 방안 수립, 발표
- \* 차세대 통일 시민 리더 시상: 조별 리더 투표 및 우수 분임 시상

---

폐쇄정책으로 대항하려고 한다. 12.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은 동독 주민들도 독일 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13. 동독의 독일인들도 동독의 발전에 대한 자부심이 커지고 있다. 14. 독일의 통일은 우리의 목표이다. 15. 서독이 독일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Empfehlungen zur Behandlung der deutschen Frage im Unterricht. Beschluß der Kultusministerkonferenz vom 23. November 1978", Hessisches Institut für Bildungsplanung und Schulentwicklung(Hrsg.), *Politische Bildung in Hessen. Sammlung rechtlicher Regelungen und Empfehlungen für die Sekundarstufe I und II aus den Jahren 1956 bis 1979*, 1979, 248-255; 오기성·권영경·김창환·이우승·최광현, 『통일교육지침체계 재정립에 관한 연구』, 통일부 용역과제, 2003, p. 51; 오기성, 앞의 글, 2017, p. 11; 김진숙, "통일 전 독일의 '독일문제에 대한 교육지침서'와 한국의 '통일교육지침서' 비교", 『비교교육연구』 제24권 제4호, 2014, pp. 32-33.

3) 교육 일정표(예시): 훈련형 2박 3일 프로그램

“차세대 통일 시민 리더 과정(단기)”

일차	시간	내용	주요활동
1일차	13:30~14:00	등 록	
	14:00~15:00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안내 및 마음 열기 활동
	15:00~17:30	* 특강: 통일정책 * 조별 토론 및 실습	* 특강: 통일정책, 통일 환경, 남북관계 * 조별 토론: 통일 관심 제고 방안 * 조별 실습: 카드 뉴스 만들기
	17:30~19:00	석 식	
	19:00~22:00	* 특강: 북한 동향 * 조별 토론 및 실습	* 특강: 북한 동향 * 조별 토론: 플립드 러닝 * 조별 실습: 하브루타 질문 학습
2일차	07:30~09:00	조 식	
	09:00~11:30	* 특강: 독일 통일 * 조별 토론 및 실습	* 특강: 독일 통일의 교훈 * 조별 토론: ‘독일문제에 관한 교육지침’ 토론헬기 * 조별 실습: ‘남북한 통일 교육 지침’ 만들기
	11:30~13:00	중 식	
	13:00~15:00	* 특강: 통일 글쓰기 * 사례 발표 * 조별 실습 활동	* 특강: 마음을 움직이는 통일 글쓰기 * 사례 발표: 대학생 통일기자단 우수 사례 * 조별 실습 활동: 통일 글쓰기
	17:30~19:00	석 식	
	19:00~22:00	*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 조별 토론 및 실습	*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조별로 진행 * 조별 토론: 사회통합 증진 방안 * 조별 실습: ‘하나 되기’ 매뉴얼 만들기
3일차	07:30~09:00	조 식	
	09:00~11:00	* 조별 발표 및 시상	* 조별 발표: ‘통일의지’ 확산 방안 * 차세대 통일 시민 리더 시상
	11:00~11:30	설문조사 및 마무리	
활용 방안		* [원내교육] 통일부 공무원반, 신규공무원반, 지자체 공무원반, 시민단체(종교단체 등)반, 통일 미래기획과정, 전문과정반(차세대 전문가 양성, 전문강사반 등), 예비교사반(대학생반), 중등 교사반(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등), 연구학교 교사반 * [학교] 선도대학사업(대학별 캠프 활동 등), 통일리더캠프(고·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 통일 교육 체험경비지원사업 * [사회] 지역통일교육센터 자체 사업 등에 활용, 전국 통일관 연계 및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등과 협업 가능	

## V. 나가며: 기대와 전망

본 연구는 ‘통일을 지향하는 민주적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다. 여기서는 통일 시대를 지향하며 평생교육이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고,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범국민적 통일의를 고양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성인학습자 대상의 민주적 시민성 함양 프로그램을 구축하고자 했다. 민주적 시민성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및 통일교육지원법이 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 지향과 긴밀하게 관련된다는 점에서 통일을 이룩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 미래상은 통일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고, 모두의 자유와 평등, 민주와 복지, 존엄성이 보장되는 평화로운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생활 방식으로서의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인식하고, 민주적 의사 결정 및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니며, 민주적 원리와 절차에 따른 행위 능력을 통합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민주적 시민성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민주적 시민성은 통일을 성취하는 과정에서뿐 아니라 통일된 공동체를 이룬 뒤에 남북한 모든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고양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통일한국에서의 사회통합은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 뿐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구성원들의 가치와 태도가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 시대의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은 모든 통일한국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평생교육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학령과 시·공간을 초월한 다양한 형식을 통해 평생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모든 개인은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기회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평생교육의 기본 입장은 통일한국의 사회 통합과 구성원들의 시민의식 고양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통일 시대의 평생교육은 통일이라는 사회 변동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이 요청되는 지식과 기술, 가치·태도 그리고 행위양식 등을 갖추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통일의 미래상 가운데 통일을 지향하는 민주적 시민성 함양 교육은 대한민국 내에서와 남북한 간 모든 구성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소통과 교류를 증진함으로써 상호 의존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이라는 거대한 사회 변동으로 인한 제도와 가치관의 혼란, 또는 부담감과 불안감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통일된 공동체 내에서의 민주적 시민성 함양은 남북 간의 이질성보다는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측면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통일이 가져다줄 수 있는 자유, 민주, 평화, 복지, 인권 등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 감으로써 통합을 완성하고 통일 공동체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통일 이후에는 분단으로 인한 폐해와 이념적 갈등은 소멸하거나 감소하겠지만, 통일로 인한 새로운 제도와 인간관계로 인한 다양한 갈등과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통일 시대의 사회통합은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절차 뿐 아니라 그 배경으로서의 문화적 토양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화적 바탕을 형성하는 구성원들의 가치와 태도는 그 변화에 있어서 장기기간을 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평생교육의 과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 통일을 성취하고 통합을 완성하기 위한 통일 시대의 평생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는 비단 사회통



합을 목표로 하는 동화의 노력이나 지식을 갖추는 것을 넘어선다. 통일한국의 평생교육은 구성원 모두의 건강을 비롯한 안정적인 생활의 유지에 기초를 두어야 하며, 통일된 공동체 내에서의 건전하고 즐거운 인간관계와 시민적 책무감, 그리고 구성원 개개인이 느끼는 만족의 감정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의 민주적 시민성 함양 평생 교육은 단지 경제·사회적 효용성의 목표를 넘어, 개인적으로는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자아정체성 확립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남북한의 모든 구성원들이 성숙한 시민으로서 상호 소통과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고된 시민적 역량과 시민 의식은 통일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통일 이후의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갈등 가능성과 불안정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갈등으로 인한 역량 낭비를 최소화하게 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의 유형 분류를 참조해 통일을 지향하는 민주적 시민성 함양 프로그램 구축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시도했다. 첫째, 여러 설문 결과 등에서 발견되는 바와 같이 분단 속에서 70년 이상 살아오면서 분단에 점차 무감각해지고 있고 있는 우리나라 구성원들의 인식 현실을 감안해, 통일을 지향하는 민주적 시민성 함양 프로그램을 생활 속에서 친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자유 교양 프로그램’의 형태로 구축하고자 했다. 둘째,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다양한 통일교육 연수 대상들은 공무원, 교사, 시민단체를 비롯해 대학생, 재외동포, 유학생에 이르기까지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성인 학습자 특유의 학습 방식을 추출하고 이에 적합한 방식으로 통일교육과 관련된 지식, 기술, 태도 등 자신의 역량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 주도성 함양 프로그램’으로 구축하고자 했다. 셋째, 현대 사회로 오면서 사회적 갈등의 양상이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현실을 고려해, 일상 속에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구체적인 실천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참여 역량 증진 프로그램’의 형태로 개발하고자 했다. 넷째, 급변하는 기술·매체 속에서 어느 누구도 공식적 학교 교육과정만으로는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는데 한계가 있음을 감안해, 각 직능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이것이 자신의 가치와 역량을 현실적으로 증진할 다양한 이수증 및 수료증 형태로 이어지는 ‘훈련형 프로그램’을 구축하고자 했다.

연구에서 제시한 예시 프로그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 교양 프로그램’으로서 “오감(五感) 만족 유니테인먼트 활동 프로그램”을 주제로, ‘내가 그리는 통일 스토리’, ‘이심전심(以心傳心), 몸으로 표현하는 통일’, ‘함께 나눠요, 한반도 통일 향기’, ‘맛있는 통일 이야기’, ‘흥겨운 통일 공연’ 등을 담았다. 둘째, ‘자기주도성 함양 프로그램’으로는 “시서화(詩書畫)를 통한 통일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을 주제로, ‘리더십 함양 특강’, ‘통일 문학과와의 만남’, ‘나만의 통일 슬로건’, ‘탈북 화가(또는 작품)와의 만남’, ‘통일 한반도를 그리다’, ‘시와 그림의 만남’, ‘통일 시인의 길’ 등의 활동을 담았다. 셋째, ‘참여 역량 증진 프로그램’은 “풀뿌리 통일시민 지역사회 학습 동아리 활동”을 주제로,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특강과 실습(갈등 해소, 통일공동체 협약)’, ‘사례 발표와 토론’, ‘조별 공연 ‘먼저 온 통일스토리’ 등을 포함했다. 넷째, ‘훈련형 프로그램’으로는 “차세대 통일 시민 리더 과정(단기)”으로서 ‘특강 및 실습(통일 정책, 북한 동향, 독일 통일 또는 통

일 교육, 통일 글쓰기)',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와 '하나 되기' 등을 포함했다.

통일을 지향하는 민주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연구의 기대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화·다문화 추세, 매체·기술의 급속한 변화, 고령화로 인한 세대 공존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본 연구는 평생교육, 시민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적 관점으로 통일교육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통일교육은 평생교육의 측면에서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지역, 계층을 고려하는 시공간적 확장이 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는 범국민적인 통일의지 고양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통일을 지향하는 민주적 시민성 함양 프로그램은 오늘날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분단 현실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갈등을 극복하는 역량을 증진하며, 통일의 청사진 및 로드맵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며, 통일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사회적 역량의 결집에도 기여할 수 있다.

셋째, 학교에서의 정규 교육과정 및 또래집단을 통해 민주적 시민성에 대한 사회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탈북 청소년에 비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고 있는 성인 탈북민들은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로 인해 성인 탈북민들은 기존에 북한에서 학습했던 정치사상교양의 영향력으로부터 충분히 자유롭지 못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일반 주민들에 비해 자유민주적 신념 및 인권 의식 등이 취약한 측면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을 지향하는 민주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구축은 2017년 현재 3만 명을 넘어선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다 적합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시민적 참여와 책무성은 서로의 다양성과 '다름'을 이해하고 포용적 태도를 기르는 것과 관련되며, 이는 오늘날의 민주시민교육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방향과도 상통한다. 따라서 통일을 지향하는 민주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통일 과정뿐 아니라 통일 이후의 내적·사회적 통합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영혜·양승실·유성상·박현정. 『민주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1.
- 강원택. 『한국의 선거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서울: 푸른길. 2004.
- 고선규. 『시민, 정치교육의 현황과 과제: 선거연수원 사례』. 선거연수원. 2015.
- 구영록. 『인간과 전쟁: 국제정치이론의 체계』. 서울: 법문사. 1977(1986).
-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 평생교육 협력체제 구축방안』.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정책포럼 자료집. 2001.
- 김국신 외. 『분단극복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 2』. 서울: 한울. 1994.
- 김성수·신두철·유평준·정하윤.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교육부 정책연구 보고서. 정책 2015.
- 김중서 외. 『평생교육원론』. 서울: 교육과학사. 1993.
- 김중서·김신일·한승희·강대중. 『평생교육개론』. 파주: 교육과학사. 2009.
- 김창환 외. 『독일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실태 분석』. 통일교육원. 2002.
- 김태준. 『한국청소년의 시민역량 국제비교 연구: 국제시민교육연구(ICCS)참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0.
- \_\_\_\_\_. 김안나·김남희·이병준·한준. 『사회적 자본형성의 관점에서 본 시민의식측정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3.
- 김한별. 『평생교육론』. 서울: 학지사. 2014.
- \_\_\_\_\_. 박소연·유기웅. 『평생학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파주: 양서원. 2010.
- 김현·송경재. 『시민성 제고를 위한 대안적 패러다임의 모색 - 시민교육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 2015.
- 박광기.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2.
- 박길성. 『사회는 갈등을 만들고 갈등은 사회를 만든다』.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13.
- 박종철 외.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박찬석. 『북한교육연구』. 한국학술정보. 2013.
- 손경애·이혁규·옥일남·박윤경.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서울: 동문사. 2010.
- 송경재·채진원. 『사회혁신을 위한 국민인성 및 시민의식 제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정책연구용역사업. 2014. 12. 20.
- 송호근.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세대, 그 갈등과 조화의 미학』.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3.
- 신진욱. 『시민』. 서울: 책세상. 2008.
- 심성보·이동기·정용주 외. 『보이텔스바흐 합의 정신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 정책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교육정보연구원. 2016.
- 안기성 외. 『남북통일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의 역할(아산재단연구보고서 제47집)』. 서울: 집문당. 1998.
- 오기성·권영경·김창환·이우승·최광현. 『통일교육지침체계 재정립에 관한 연구』. 통일부 정책

- 연구보고서. 2003.
- 오기성. 『인문학으로 다가가는 통일교육』. 양서원. 2016.
- 유네스코 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 저, 김용주·김재웅·정두용·천세영 공역. 『21세기 교육을 위한 새로운 관점과 전망』. 서울: (주) 도서출판 오름. 1997.
- 윤광일·오수웅·박가나. 『통일대비 남북한 주민대상 민주시민교육 커리큘럼』.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2016.
- 이동수·송재재·신두철·이성훈·주성수·채진원. 『민관협력과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청사진』. 특임 장관실 정책연구보고서. 2012.
- 이무근. 『직업교육학원론』. 서울: 교육과학사. 1998.
- 이온죽 외. 『남북한 사회통합론』. 서울: 삶과 꿈. 1997.
- \_\_\_\_\_. 『북한사회의 체제와 생활』. 서울: 법문사. 1993.
- \_\_\_\_\_. 이인정.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과 조선민주녀성동맹 - 사회변동과 체제유지의 기제』.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 이인정. 『북한 새 세대의 가치 변화』.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7.
- 이호영 외. 『사회적 합의 수준 제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 이희수·백은순·방명숙.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유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0.
- 장근영 외.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2011민주시민역량 실태 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 장은주. 『왜 그리고 어떤 민주주의인가?: 한국형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이론적 기초에 대한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2014.
- 정지웅. 『통일과 국력』. 서울: 학문사. 2002.
- 조영희·김선혜·김학묵·박수선. 『평생교육 차원에서 대국민 평화교육 실시방안 - 평생교육으로서의 평화지향적 사회통일교육』. 통일부 정책용역보고서. 2007.
- 조한범. 『남남갈등 해소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6.
- 최운실 외. 『평생교육 참여실태 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5.
- 최현호. 『남북한 민족통합론』. 서울: 형설출판사. 2003.
- 한만길. 『통일시대 북한교육론』. 교육과학사. 1997.
- \_\_\_\_\_. 외. 『통일을 이루는 교육』. 교육과학사. 2016.
- 한승희. 『평생교육론』. 서울: 학지사. 2006.
- 홍익표·진시원 공저. 『남북한 통합의 새로운 이해』. 도서출판 오름. 2004.
- Cogan, J.. *Citizenship for the 21st Centur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Education*. London: Kogan Page. 2000.
- Martorella, P. H.. *Teaching Social Studies in Middle and Secondary School*. New York: Macmillan. 1991.
- Putnam, R..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Schuster. 2000.

- 강대현·모경환. “한국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의 과정과 양상-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연구와 실천』. 2013.
- 곽미정·문신용. “시민의식 영향요인 연구.” 『시민사회와 NGO』. 제8권 제2호. 2010.
- 김기환·윤상오·조주은. “디지털세대의 특성과 가치관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 제16권 제2호. 2009년 여름호. 2009.
- 김신희. “탈북청소년의 시민성 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김미경. “독일통일 이후 통일교육.” 한독사회과학회·통일교육위원 경기협의회 공동학술세미나 자료집. 2011. 8월.
- 김진숙. “통일 전 독일의 ‘독일문제에 대한 교육지침서’와 한국의 ‘통일교육지침서’ 비교.” 『비교교육연구』 제24권 제4호. 2014.
- 김학성. “통일문화연구의 방향-독일사례를 중심으로.”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화연구(상)』.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남경희. “일본의 학교 교육에서 시민교육의 추진 동향.” 『사회과교육』. 51권 2호. 2012.
- 박광기. “한반도 통일비전과 통일교육의 재인식.” 『정치·정보연구』 제15권 1호. 2012. 6.
- 박균열. “현대 한국의 시민의식 실태조사 내용체계와 향후 과제.” 『윤리연구』. 제93호. 2013.
- 박재홍. “세대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쟁점.” 『한국인구학』. 24(2). 2001.
- \_\_\_\_\_. “세대 개념에 관한 연구: 코호트적 시각에서.” 『한국사회학』. 37(3). 2003.
- 박찬석. “북한의 사회교육에 관한 연구.” 『통일전략』 제11권 제1호. 2011.
- 박형중. “남북한의 사회격차와 사회 통합.” 『남북한 사회 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배영주. “세계 시민의 역할과제를 중심으로 한 세계시민교육의 재구상.” 『교육과학연구』. 제44집 제2호. 2013.
- 서대숙. “민족통합의 개념과 방향.” 한림대학교 민족통합연구소 편. 『민족통합과 민족통일』. 춘천: 한림대학교출판부. 1999.
- 송경재. “국민인성진흥법의 안착을 위한 제언.” 국회입법조사처·중앙일보 공동학술회의 자료집. 2015.
- 안선경. “교육에서 정치적 중립성이란 무엇인가? -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함의.” 『법과 인권교육연구』 제10권 제1호. 2017.
- 여현철. “지역사회의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2017 북한연구학회 추계학술회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교육의 과제』. 2017. 10. 20.
- 오기성. “한국의 학교 통일교육 지침 분석 연구.” 『교육논총』 제34권 3호. 2014.
- 우평균. “21세기 통일교육의 방향성: 현행 체제에 대한 평가와 지향.” 『평화학 연구』 제12권 제3호. 2011.
- 이동기. “정치 갈등 극복의 교육 원칙.” 『역사교육연구』 26호. 2016.
- 이동수. “지구화시대 시민과 시민권: 무폐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21호. 2008.
- 이경희. “남북한통일에 대비한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한국동북아논총』 제 54집.

- 2010.
- 이규영. “독일의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국제지역연구』. 제9권 3호. 2005.
- 이범웅. “남북한 주민간의 가치 통합의 모색 - 공동체주의의 통합 원리를 중심으로.” 2009년 통일 교육 학술세미나 자료집. 『남북한 주민 통합을 위한 교육적 과제』. 한국교원대학교 통일 교육연구소·다문화교육연구소. 2009.
- \_\_\_\_\_. 박찬석. “도덕과에서의 북한학 및 통일학적 접근.” 『개정판 도덕윤리과교육학 개론』. 교육 과학사. 2013.
- 이신애.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관계성 연구.” 2017 북한연구학회 추계학술회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교육의 과제』. 2017. 10. 20.
- 전득주. “미국의 시민교육: 그 배경, 현황 그리고 문제점.”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7호. 2002.
- 전선영. “지역시민의식 형성 영향 요인: 용인시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2호. 2011.
- 전성우. “동서독 통일과정의 사회학적 함의.” 『경제와 사회』. 1995 여름호. 1995.
- 전효관. “소프트해진 통일교육. 그 쟁점과 위상.” 『현대북한연구』 6권 2호.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03.
- 정동영. “장애학생의 전환 지원을 위한 특수학교 직업교육의 재개념화.” 『정신지체연구』. 8(4). 2006.
- \_\_\_\_\_. “장애우의 사회참여와 평생교육.”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교육 과제 세미나 자료집. 평생 교육진흥원. 2010. 10. 10.
- 정세구. “통일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교육연구회』. 1993.
- 정호경. “재통일 전후의 독일의 정치교육 경험과 그 시사점.” 『공법연구』 제45집 제2호. 2016.
- 조민. “통일정책과 국민통합.” 『남남갈등진단 및 해소방안』. 경남대학교 통일관 개관기념학술회의 자료집. 2004.
- 조정아. “통일교육의 쟁점과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16권 제2호. 2007. 12.
- 조찬래. “민주시민교육.”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13권 제2호. 2012.
- 지은림·선광식. “세계시민의식 구성요인 탐색 및 관련 변인 분석.” 『시민교육연구』. 제39권 제4호. 2007.
- 차재호. “한국사회에서의 가치관 변화와 가치에 관한 명제의 도출.” 『심리과학』 vol.3. no.1. 1994.
- 최현. “시민권, 민주주의, 국민-국가 그리고 한국사회.” 『시민과 세계』. 제4호. 2003.
- 추병완. “통일교육에서 평화교육적 접근의 타당성.” 『통일문제연구』. 제39호. 2003.
- 홍은영·최치원. “문화적 실천으로서 독일의 정치교육 혹은 민주시민교육 - 제도적 이상과 현실.” 『유럽사회문화』 제17호. 2016.
- Dennis. R. E. Williams. W. Giangreco & Cloninger. C. J.. “Quality of life as context for planning and evaluation of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Exceptional Children*. 59(6). 1993.
- Halpern. A. S.. “Quality of life as a conceptual framework for evaluating transition outcomes”.

*Exceptional Children*. 59(6). 1993.

Ruminski. E. “독일 통일 후 정치재단의 민주시민교육.”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13권 제2호.  
2012.